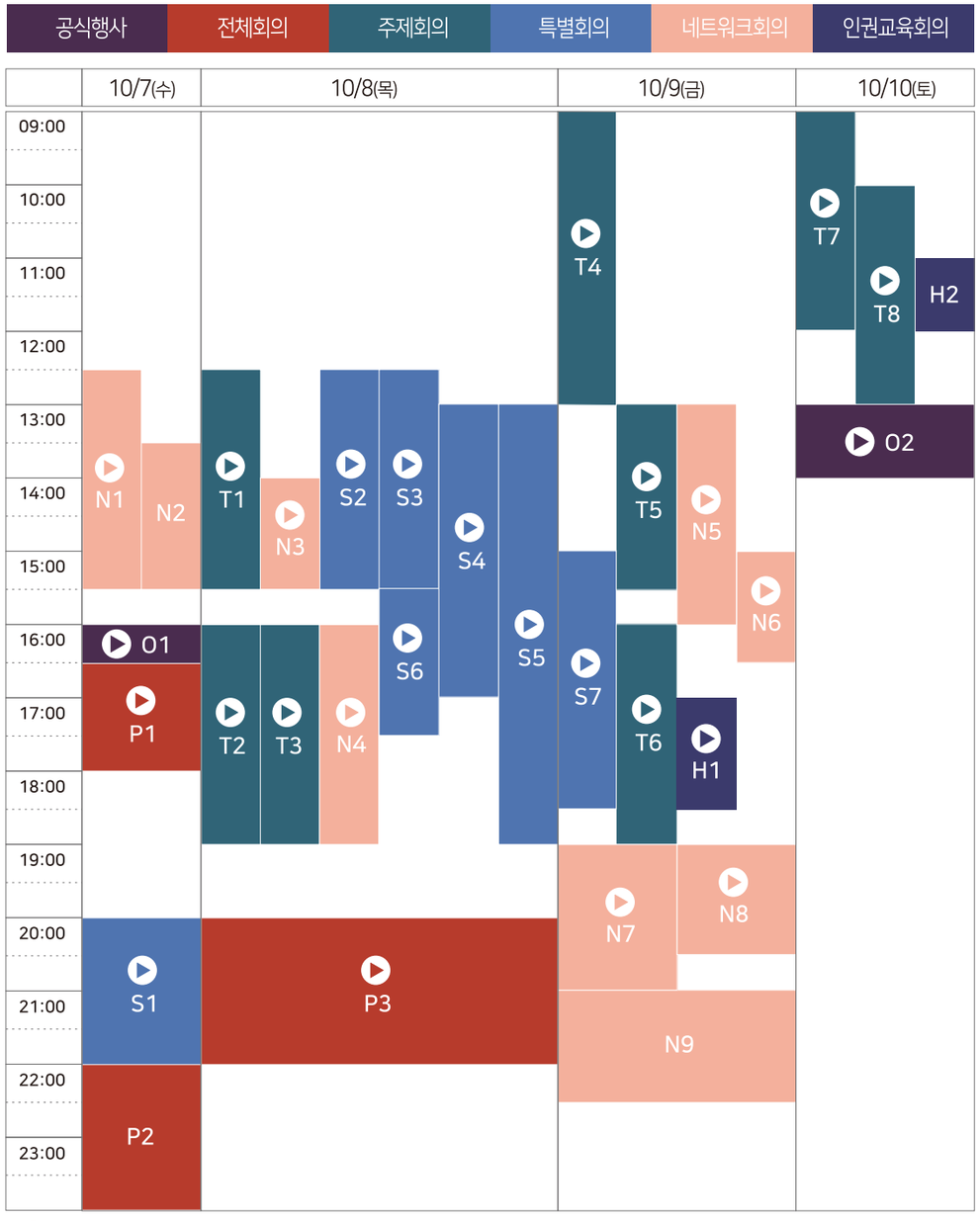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020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기억과 공동체 -
인권도시의 미래

프로그램북

시간표



※ ▶ 홈페이지 생중계

장 소

O: 공식행사	O1: 개회식	홈페이지 생중계
	O2: 폐회식	홈페이지 생중계
P: 전체회의	P1: 전체회의1	홈페이지 생중계
	P2: 전체회의2	비공개
	P3: 전체회의3	홈페이지 생중계
T: 주제회의	T1: 사회적경제	305+306호 / 홈페이지 생중계
	T2: 환경	209+210호 / 홈페이지 생중계
	T3: 노인	212+213호 / 홈페이지 생중계
	T4: 장애	209+210호 / 홈페이지 생중계
	T5: 여성	305+306호 / 홈페이지 생중계
	T6: 어린이·청소년	209+210호 / 홈페이지 생중계
	T7: 안전도시	209+210호 / 홈페이지 생중계
	T8: 이주민	212+213호 / 홈페이지 생중계
S: 특별회의	S1: 도시권	홈페이지 생중계
	S2: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홈페이지 생중계
	S3: 글로벌 청년 주거권 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S4: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302+303호 / 홈페이지 생중계
	S5: 인권논문발표	홈페이지 생중계
	S6: 해외인권정책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S7: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N: 네트워크회의	N1: 국내인권도시 인권옹호자(공무원) 워크숍	홈페이지 생중계
	N2: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비공개
	N3: 차별금지 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N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206+207호 / 홈페이지 생중계
	N5: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홈페이지 생중계
	N6: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UNESCO-APCAD) 워크숍	홈페이지 생중계
	N7: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 회의	홈페이지 생중계
	N8: 타운홀	홈페이지 생중계
	N9: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비공개
H: 인권교육회의	H1: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	홈페이지 생중계
	H2: '지방정부와 인권' 종합교육과정 프로그램	비공개
A: 연계행사	A1: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

목 차

01. 인사말 ····· 8

02. 컨셉노트 ····· 16

03. 프로그램 ····· 26

1일차 / 10월 07일
2일차 / 10월 08일
3일차 / 10월 09일
4일차 / 10월 10일

04. 안내 ····· 156

01. 인사말

개회사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함께 해 주신 국내외 인권지도자와 활동가 여러분!
150만 광주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포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의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계인권도시포럼도 10회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매년 10월에 개최해왔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5월로 옮겨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5·18기념행사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포럼은 10월로 연기됐고,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한 위기도 많이 겪었고, 이겨냈습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인권도시 간 연대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세계인권도시포럼 10년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장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년이 된 올해 포럼은 인권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홈페이지 생중계와 TV녹화방송 등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과거의 인권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의 현재를 진단하며, 인권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권도시의 국제연대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 본부가 포럼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포럼은 UN기구와 중앙 지방 정부, 국제인권단체와 연구소, 활동가 등 개별 지역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분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참여하는 세계적 인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한 분들 모두 각자가 속한 도시의 인권신장을 위한 역사와 유산을 계승·발전 확산시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에 맞서 인권도시의 책무와 협력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도 UN인권기구와 함께 국내외 인권도시, 인권단체들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강화하면서 인권연대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계시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성공개최를 위해 큰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고, 개회식 기조발제를 해주실 미첼 바첼렛트 UN인권최고대표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영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국내외 인권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을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과 연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성과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번 포럼을 잘 준비해주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10주년으로 더욱 뜻깊은 한 해입니다.

국제인권사회에서 '인권의 지역화'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시민의 일상적 삶터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자 해결해야하는 궁극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도시의 역사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광주는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인권 가치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제주, 여순, 마산, 천안 등 여러 도시들도 이름만 대도 무수한 역사적 장면들을 함께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아픈 기억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늘 약자를 향하기 마련이고 불순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환되어 선동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 공동체가 어떻게 혐오와 차별이라는 구분짓기를 무너뜨려왔는지 또한 분명히 기억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은 올해 초 대구의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기꺼이 병상을 내주는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50년대 부산의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민과 실향민들이 북적이며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거두었던 공동체로서의 부산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 누구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공동체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의 평등 실현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여는 시작입니다. 그 여정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늘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인류사회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위험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 불안과 사회문화적 타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 지도자, 인권 현장의 파수꾼인 인권활동가, 공공기관의 인권 업무 담당자, 그리고 광주 안팎의 시민들이 함께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의 조건 때문에 모두가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연결되고 만나게 된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와 조건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셨을 이용섭 시장님께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최 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해주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에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기로 한 미첼 바첼렛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인권도시의 시장님들과 발제자, 토론자, 온라인 참가자들 모두를 가슴 뜨겁게 환영합니다.

'인권도시'는 각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의 현재 속에서 미래를 기획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10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를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합니다. 광주가 인권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1980년 광주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의 기억을 토대로 공동체의 현재를 점검하고 어떻게 인권도시의 미래를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그룹, 주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 각자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제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인간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인권도시 운동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제와 단절, 혐오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권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입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새로운 모색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인권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교육행정의 책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교육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설계를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광주의 교육 현장이 인권을 학습하고 경험하며, 실천하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의 교육 현장에서도 인권도시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이미경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포럼이 성사되도록 도와주신 여러 참여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광주에게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인권포럼으로 자리매김한지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 포럼의 주제「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는 지금 딱 시의적절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는 분열되고 그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조차 뒷걸음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이 인권과 안전에서 가장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1년 <광주인권도시선언> 이후 모범을 보여온 것처럼, 이번 포럼에서도 광주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인권도시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체회의3의 주제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헤쳐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방정부 △로컬 NGO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인권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간의 협력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방정부 △로컬 NGO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학계와 민간까지 협력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요.

더불어 △사회적경제, △환경, △노인, △이주민, △안전도시 등 우리 사회가 꼭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이 다채롭게 담겨 있어 기대를 더합니다. 난관 속에 개최된 만큼 이번 포럼에서 예년을 뛰어넘는 다양한 논의와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광주광역시의장
김용집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아시아 인권 헌장 광주선언(1998년)'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10회 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공동주최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광주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인권도시로 공인되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팬데믹은 대륙별 국가별 인종별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별과 소외라는 그릇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혜안을 모아보고자 이번 포럼에 함께해주신 국내외 인권전문가님들의 숭고한 뜻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지구촌의 평화와 인권 증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포럼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눔과 연대의 자랑스러운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해나가고 있는 광주시의회도 세계를 밝히는 인권도시 광주의 등불이 더욱 힘차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컨셉노트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발자취

1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1년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래로 인권도시의 의미를 정립하고, 광주인권도시선언을 통해 인권도시 실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인권 실천 주체들과 협력하면서 '인권의 지역화'라는 목표를 뚜렷이 해왔습니다.

2 지난 10년간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인권담론을 확산시키고,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인권도시 실행규범과 과제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관계자 및 인권전문가들, 그리고 인권증진에 노력해온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제10회 포럼부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면서 포럼의 내용과 진행 방식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목표 및 주제

1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도시들은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인권도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맞서 대항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권도시로 성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식민지 지배의 역사 또는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 의해 인권도시로 발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한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없이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에 의해 포용도시로 발전해 온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도시는 다양한 방식과 유형을 통해 각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 2020년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0년째가 되는 해이자, 오늘의 인권도시 광주를 있게 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고, 이를 인권공동체를 향한 열망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3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주목하는 것은 인권도시의 시간적 구성입니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인권 역사를 성찰하고, 인권의 현재를 진단하며, 인권도시의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야말로 인권도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4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기억과 공동체: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유산을 인권교육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미래 인권도시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인권도시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인권 주체들의 책무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프로그램 구성

1 세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인권도시들이 모여 인권에 기반을 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경험과 노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회의1에서 지방정부 대표들은 각 도시의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권도시를 만들어 온 전략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체회의2는 전 세계적인 인권도시 운동과 그 창조적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권도시 시장단들이 국제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언할 것입니다. 전체회의3에서는 인권도시들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현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된 관련 정책들을 공유하여 현재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권기반 접근법을 온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입니다.

2 주제회의는 노인, 여성, 장애, 어린이·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평등의 원칙 속에서 인권 이슈를 점검하고 인권 개선 과제를 논의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에 헌신하는 주요 실천 주체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가폭력에 관한 세션은 올해 포럼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의 기억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모여 과거의 기억을 인권과 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승화시켜낸 과정을 논의합니다. 또한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국제연합(ICCAR)과 그 지역 네트워크인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4 인권교육회의는 지난 5월부터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방정부와 인권 종합교육과정'과 광주 국제인권교육센터 개관을 위한 정보 및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주관 및 참가

1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주최합니다.

2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그리고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가 함께 주관합니다.

3 포럼은 UCLG ASPAC,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포럼(INFID) 등 약 40여개 국내외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다양한 회의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48개국 131개 도시에서 2100여명이 참여하였고 2020년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는 전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조발제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이번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연설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스스로 인권도시임을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역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보편적인 권리를 위한 시위를 보았으며, 이러한 시위는 주로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차별과 박탈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 건강한 지구에서 살 권리, 그리고 참여와 포용력 있는 미래에 대한 권리를 위해 시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을 대표하여 최전선에 있습니다. 도시는 소외된 집단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집결하게 하고, 정책 입안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권에 기반한 지역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도시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을 촉구하는 목표 11번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도시 의제를 지역화하는 데 있어 지방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와 지방정부는 인권을 시민에 대한 책임의 지침이자 공동의 프레임워크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하는데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전례 없는 건강, 경제 및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여 이러한 도전들을 더욱 시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회에서 만연한 불평등과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하는 의무와 일생일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미래의 위기에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저는 도시와 지방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신기술이 모두를 위해 작동되는 것을 포함하여, 도시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지방정부의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중점을 둔다.
- 모든 공공정책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장려한다.
- 국제 인권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연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를 다시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단호한 조치와 지방 및 중앙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 당국의 활성화 대책과 기타 대응책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인권에 헌신하는 시장들의 강력한 네트워크는 지침이나 글로벌 공통기준의 정교한 준비와 채택을 통해 인권 의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인권도시운동"은 영감을 주고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가 모든 주민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며, 실현되는 활기찬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조발제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행사를 주최한 광주광역시에 먼저 감사드리며, 유네스코가 처음으로 공동주최로 참여하게 된 것도 더욱 기쁜 일입니다.

유네스코의 기본 신념 중의 하나는 '현대 세계에서는 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인류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도시의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과 도시의 공간구성 역량을 통해 도시는 공공정책 시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거리에서 수십 개의 언어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처럼 도시는 진정 작은 우주와 같아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도시는 특이한 실험실이자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맡아야 할 필수 역할 즉, 변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도시의 잠재적 역량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유네스코의 모든 도시 네트워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습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물과 기후를 위한 메가시티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한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들이 유네스코의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국제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도시간의 연대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조도시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효과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베이루트와 함께 유네스크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많은 도시들이 베이루트를 돕고자 했고, 저는 이들 도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곳 광주에서는 이러한 연대와 창의성을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디지털 예술 분야의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광주는 특별한 역사와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유네스코의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ICCAR)'에서 회원도시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은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원도시들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차별, 가정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몇몇 도시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는 이들을 위해 법률 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했고, 멕시코에서는 가정폭력 방지 캠페인과 책임자 처벌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시들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연대함으로써 이루기 힘든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인권은 가정. 즉,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인격을 추구하는 모든 남녀노소가 사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이루고자 하는 바일 것 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께 유네스코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프로그램

1일차, 10/07
2일차, 10/08
3일차, 10/09
4일차, 10/10

회 의 일 정 <10/07>

12:30~15:30	**N1 국내 인권도시 인권옹호자(공무원) 워크숍**	28쪽
공식언어	한국어, 문자	
주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중계
개회	좌장 **권혁장**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발제	**안시형** [한국] 금천구청 인권전문관	
	양슬기 [한국] 금천구 조례제정추진단 위원	
	조혜진 [한국] 금천구 인권위원회 위원	
13:30~15:30	**N2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32쪽
공식언어	한국어	
내용	인권조례를 통한 지역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주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	
개회	좌장 **이진숙** [한국]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비공개
발제	**윤대기** [한국]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숙미 [한국]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16:00~16:20	**O1 개회식** ※ SBS 녹화방영: 10월 8일 오후 4시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수어, 문자	
개회사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장	
환영사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온라인 중계
기조발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오드레 아줄레 [프랑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영상 상영	10년 성과영상 상영	
16:20~18:00	**P1 전체회의1** ※ SBS 녹화방영: 10월 8일 오후 4시	35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수어, 문자	
주제	인권도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 해소	
주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좌장 **정근식**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회 위원장	
발제	**마쿠스 쾨니히** [독일] 뉘른베르크 시장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장	온라인 중계
	파델 무사 [튀니지] 아리아나 시장	
	최영애 [한국] 국가인권위원장	
	비마 아랴 수기아르토 [인도네시아] 보고르 시장	
	클라우디아 로페즈 에르난데스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토론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	
	토드 홀랜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개발경제사회권리국 부장	

회 의 일 정 <10/07>

20:00~22:00	**S1 도시권**	42쪽
공식언어	영어	
내용	도시권: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강화 및 관점전환	온라인 중계
주관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PR2C), 코타키타 재단, 후아료 위원회, 중국 사회평등참여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	
	세션 1: 아시아 지역의 도시권 – 연구진행 상황	
개회	좌장 **넬슨 스웰 주니어** [브라질]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 책임자	
발제	**밍 창** [중국] 사회적평등참여센터 소장	
	수연우 [싱가포르] 사회적평등참여센터 연구원	
	피데스 바가사오 [필리핀] 후아료위원회 동남아시아 담당관	
	신경구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교육협력 정책자문관	
	아흐마드 리파이 [인도네시아] 코타키타 재단 공동창립자	
	필자 후스나 [인도네시아] 코타키타 재단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세션 2: 도시권 주제별 대화 – 코로나19 유행 후의 도시, 기후변화, 거주지	
개회	좌장 **알리크 프레터** [브라질]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 책임자	
발제	**에바 가르시아 추에카**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협력센터 코디네이터	
	알베로 산체스 브라보 [스페인] 세비야대학교 교수	
	에데시오 페르난데스 [브라질] 국제법률도시공간연구그룹 창립자	
22:00~24:00	**P2 전체회의2**	43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주제	인권도시 시장단 회의: 세계인권도시 운동의 미래	
주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좌장 **에밀리아 사이즈** [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좌장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환영사	**이용섭** [한국] 광주광역시장	
기조발제	**임상범** [한국]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발표	**리오 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경제사회문화부 팀장	
	에릭 피올 [프랑스] 그로노블 시장	
	로히 맬릭 로우 [감비아] 반줄 시장	
	마르테 뫼스 페르세 [노르웨이] 베르겐 시장	
	마이라 멘도자 [아르헨티나] 킬메스 시장	
	무니르 이로미 [튀니지] 스팍스 시장	비공개
	알렉산드라 둘키에비치 [폴란드] 그단스크 시장	
	아구스틴 카사노바 [에콰도르] 포르토비에호 시장	
	린다 부르트만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부시장	
기조발제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발제	**샴스 아사디**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인권위원	
	알무데나 오세조 [멕시코] 멕시코 시티 사회포용복지국장	
	아이다 길리엔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민권리다양성 국장	
	앙리 폴 노르만딘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관계국장	
	로레나 자라테 [아르헨티나] 국제주거연맹 대표	
폐회	**에밀리아 사이즈** [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나다 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국내 인권도시 인권옹호자(공무원) 워크숍>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2019. 12. 31. 인권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뉴스앤조이가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인권조례 반대민원으로 조례제정에 실패한 지자체가 총 21곳에 이른다. 하지만 금천구의 경우에는 들어온 민원 800건 중에 찬성이 461건, 반대가 339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반대 339건 중 주소지를 남긴 금천구민은 6명에 불과한 반면 찬성 461명 중 금천구민은 341명으로 조례제정에 실패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와는 대조적이었다.

금천구가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었다. 금천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 인권조례추진단을 출범해 조례제정을 준비했다. 금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주민들은 인권독서동아리를 만들거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제정추진단에 함께 했다.

금천구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은 인권조례를 급속히 만들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한 후에 주민과 함께 추진하면 인권조례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정된 인권조례도 없애려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천구의 인권조례 제정 경험은 인권조례 반대민원에 시달리는 지자체 인권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교육

금천구 인권전문관
안 시 형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이후, 금천구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 과정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인권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후 구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인권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인권정책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단'을 올해 7월에 구성했다. 추진단은 7월부터 8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서울시 등 전국의 인권정책 모범 지자체 6개의 인권조례 각 조항을 하나씩 분석해 구 실정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했다. 이후 인권정책 전문가, 법률가 및 관계부처의 검토를 맡아 조례안을 완성했다.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조례 제정 추진단 단원들이 직접 조례 제정 촉구 서명을 받는 등의 적극적 참여와 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최종의견 800건 중, 찬성이 461건, 반대가 33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부 분석을 통해 반대의견 중 실제 금천구민은 6명에 불과하며, 찬성의견 중 금천구민은 341명으로 실제 많은 금천구민은 인권 조례제정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조례제정 절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의회 상정 전 각 의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조례안의 제정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인권 기본 조례안의 상임위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어 2019.12.31.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시행·공포되었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는 단순히 조례 제정을 넘어, 인권교육과 주민참여를 통해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인권의 달성 측면에서 기존의 '기준이행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조건형성접근방식'이 함께 추진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금천구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과정과 전략을 통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인 '인권도시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참여의 경험과 개선방안

금천구 조례제정추진단 위원
양 슬 기

금천구청 주민인권배움터 교육을 3회 수료하고 2019년에 금천구 인권조례제정추진단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구청에서 이수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우고, '인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었다면, 인권조례제정단 활동을 통해서는 사전에 이수한 교육을 통해 차곡차곡 쌓은 기량을 바탕으로 하여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판단을 하는 다른 위원분들과 함께 우리 구의 인권 실태 및 현안에 대해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우리 지역과 특수성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인권 조례를 만드는데 역량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음은 물론, 좀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실제적 기반을 만드는 행동은 무엇이며 그 것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찰해볼 수 있었다.
조례제정단 활동 이후 스스로 나 자신이'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인권에 대한 감도가 전보다 더 높아진 것을 느꼈다. 이전엔 '나'로 국한하여 대입해보고 생각해보던 시각이 '우리'를 향해 넓어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인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숙려하고, 조례안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개인적으로는 꽤 즐거웠다.

개선방안

본격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기 전, 각 위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등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절차 및 제정에 소요되는 시일 등에 대한 사전학습이 충분히 있었다면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인권관련 관련 조례 및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인권 정책에 대한 계획, 기조 등에 대해서도 더 알았다면 좀 더 확장성있고 행정단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권교육프로그램 참여의 경험과 확산방안

금천구 인권위원회 위원
조 혜 진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생소하고도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생활에서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 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행정적 민원 절차나 형사적 절차만을 밟을 때도 많다.

또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성소수자나, 이주민들, 또는 보수 개신교의 반대운동 등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인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다.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인권과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인권,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인권의 문제가 조금씩 다르다.

금천구의 '주민인권배움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인권'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또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주민인권배움터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의 기본 가치는 물론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접하고 또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다.

인권은 저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에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자각하지 못 한 세월을 보낸 분들이나 자각을 해도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한 분들, 때로는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해서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감사하게도 금천구에 주민인권배움터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그리고 그 때 함께 수강한 주민들은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이루어간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나는 인권에 대해 더 배우고 늘 생각하기 위해 주민인권배움터 1기 수료생들과 함께 인권독서동아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3년째 금천구에 유일한 인권독서동아리를 운영해오고 있다. 인권독서동아리 멤버들을 주축으로 주민배움터 수료생들, 조례제정추진단원과 함께 금천구에서 인권조례제정 과정에 함께 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주민들은 조례 찬성 서명운동을 했으며 인권의 날에는 구청 광장에서 인권에 관한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독서 모임 등을 했으며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시 인권탐방을 하는 등 주민의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들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의식 있는 주민들의 조직화된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행정이고 주민과 행정이 협력했을 때 인권조례제정 통과 등의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 조례 제정 이후 남은 과제들과 주민의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권도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주민과 행정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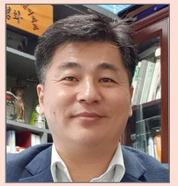
인권조례를 통한 지역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치정부의 인권보장의 책무와 집행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인권조례가 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모든 광역지자체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체로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조례가 자치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든 행정이 인권에 기반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도 필요하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네트워크' 회의에서 전국광역인권위협의회는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권제도와 정책 중에 특히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권조례가 규정하는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각 지역마다 어떠한지, 실제 수행되는 역할은 어떠한지 살피고, 바람직한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규범인 인권조례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갖추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자체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다.

인권조례를 통한 지역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인권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윤 대 기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인권에 대한 존중, 보호, 실현, 촉진 등 보장의무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권 보장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선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없이 인권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이라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원칙과 도시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로 결합하는 인권도시(Human Rights + City)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인권도시에서는 이전까지 주로 국가차원의 주제였던 인권을 도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누구나 도시 생활의 자유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자 한다.

인권도시를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 인권규범, 인권실행기구,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규범에는 인권조례, 인권헌장, 인권선언 등이, 인권실행기구로서는 인권위원회, 인권전담조직,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이.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으로는 인권실태조사,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인권교육, 인권정책협의회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에 의해서만 인권도시를 이룰 수는 없으며, 시민들로부터의 인권요구,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존중 문화, 인권 네트워크 및 연대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도시로서의 성장해왔다. 그러나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편차가 생기고 있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나아가기위해 다시 한번 인권기본조례의 정비 및 인권위원회의 위상 정립이 불가피해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정립은 단지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위원회규정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인권도시로서 갖추어야할 인권규범, 인권실행기구, 인권정책 및 프로그램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재구성이 필요해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를 되새기며, 소통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박 숙 미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를 잊지 않고 더 이상 서울시에서 반인권적인 집행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인도집행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강제철거'로 각인되어 있고 '강제철거'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반인권적 현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철거 문화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공공연하게 공권력에 의해 묵인되어 왔고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국가 공권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 이후에도 2016년 인덕마을에서는 예의 '강제철거'가 재현되었습니다. 폭력적 강제철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출범시키기에 이릅니다. 법원의 집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법 개정도 먼 미래의 일이라, 무작정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이라도 하고 시민 한사람이자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공무원으로서 불법적, 반인권적 행위가 목격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불법적 행위를 판단하고, 철거주택의 이주 대상자들에게 법적 권한과 절차를 설명해 줄 전문가도 필요했습니다. 이 때 도움을 보탠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020년 9월 17일 현재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구역 내 철거현장에 약 260여건 이상 출동하여 약 430 가구에 대한 인도집행을 감시하였습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이 있는 철거현장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원미상의 용역들의 무분별한 현장 출입이 눈에 띄게 줄고, 경비용역들의 표식이 가능한 복장 준수, 동절기(11월~2월) 집행 중지 준수 및 이주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 억제, 집행관들의 인권지킴이단 입회에 대한 태도변화부터 먼저 철거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의 입회를 요구하는 집행대상자들까지 입소문처럼 빠르게 집행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과거와 같은 폭력이나 임시 거주지 확인 없이 막무가내로 길거리로 내쫓기는 철거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복지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철거지 이주 대상자에게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절차가 자리 잡은 것도 큰 성과입니다.

철거현장의 변화를 한편으로 서울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TF를 운영하며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대외적으로는 관련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국회와 협력하여 법제도 개선을 견인하기 위한 공동 활동과 더불어 토론회, 간담회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을 소개 드리면서 전국 구석구석 강제 철거 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이것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로까지 이어지도록 전국 지방자치 단체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더 이상 철거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촉발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1>

인권도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 해소

전체회의1에서는 도시가 어떻게 그들의 역사적 과거로부터 포용,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서사와 이해를 증진시키는지 대해 알아보게 될 것이다. 광주가 올해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린 것처럼, 역사적 기억이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탐구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역할 하는 바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든 도시는 풍부한 역사 위에 세워졌다. 몇몇 도시들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현재의 시민이 어떻게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드는 살아있는 현실이다. 종종 역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열망에 밀려 무시되고, 이웃으로부터 배운 풍부한 교훈은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도시들은 특정한 역사적 과거를 기념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역사적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실이나 박물관에서 과거를 배우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뤄진다고 한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정치적 탄압, 대량 살인 혹은 집단 학살, 명백한 인종 혹은 종교적 차별, 원주민 탄압,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아동 학대 및 착취라는 큰 인권 침해를 과거는 물론 최근까지도 목격해 왔다. 전반적인 인권체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never again')"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인권침해의 역사를 생생히 경험한 부모세대나 그 이전 세대들에게 훨씬 연관성 있고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연 과거에 일어난 침해 사례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최근 몇 년간 전세계 각 도시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에 깊이 자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코로나19 위기와 이로 말미암은 조치(사회적인 거리두기, 제한조치 등)는 국가가 최소한의 필수적인 경제, 사회, 문화권을 향유할 권리를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와 다른 권리의 실현조차 어렵게 하였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발전도 저해하였다.

과거와 최근의 역사로부터 사람들은 전세계적 시위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염두해두고, 전체회의 1에 참석하는 시장과 패널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평화와 인권의 도시, 뉘른베르크

독일 뉘른베르크 시장
마쿠스 쾨니히

뉘른베르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주의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린 곳이자 비인간적인 "뉘른베르크 인종법"을 공표한 곳이며,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당시 나치 정권의 대표자들에 대한 판결과 나치 범죄의 사법적 차원의 징벌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현재 건축물로 우리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나치전당대회장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진행됐던 순회재판법정600호는 뉘른베르크하면 늘 떠올리는 것들입니다. 뉘른베르크의 역사에서 이 "죽음과 연관된 증거들"은 1993년에 조성되어 실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상적인 예술작품이기도 한 <인권의 길>와도 대비됩니다. 이 <인권의 길>은 27개의 원기둥, 두 개의 바닥 석판, 하나의 기념비, 하나의 힘있는 아치로 연결돼 있고, 각 부분에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조항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인권의 길>을 만든 페터 쇤라인 전 뉘른베르크 시장(Dr. Peter Schoenlein)은 착공식 축사에서 "뉘른베르크는 엄중한 과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뉘른베르크 시가 평화, 화해, 이해, 그리고 인권 존중에 어긋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우리 시는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왔지만, 같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고 이문화적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함께 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시는 과거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거듭하는 노력을 하는 도시입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안에 건축물 몇 개 세웠다고 역사를 기억하는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교육적 작업이 필요하며, 과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역사와 미래의 활동계획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소외와 폭력의 메커니즘에 주의를 기울이며 과거를 돌아보아야만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는 활동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치전당대회장에 있는 기록보관소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기념관을 통해 두 개의 역사적 및 정치적 기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계몽과 민주주의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동질적인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적 결속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소에서는 독일인들이 과거 인종차별적 소외로 이어진 사회 형성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인간 문명의 퇴보를 초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참여하는 각 집단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가, 경찰, 군인, 법조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현재 어떤 책임을 각 직업에서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하중략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의 기억과 인권공동체를 향한 연대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오늘의 '인권도시 광주'는 수많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80년 5월은 광주시민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인권과 민주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후 1998년 광주에서는 '아시아 인권헌장' 선언대회가 열렸고,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18은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광주는 대표적인 인권도시가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실행해왔습니다. 인권헌장과 인권지표, 인권마을 프로젝트, 세계인권도시포럼 등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시의 인권정책들은 국내 다른 도시들로 확산되어 나갔고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맞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인권진영의 최대 과제입니다. 광주는 인권, 민주주의, 연대를 주요 가치로 하는 '5·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파트너십에 UN기구 차원의 지원과 공동실천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인권도시 간의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보다 실천적인 인권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 인권도시 2030 실천의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21년부터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권에 기반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전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는 내용의 '광주형 AI-그린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국제기구, 세계지방정부, NGO 등과 함께 이러한 인권연대를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도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 해소

아리아나 시장
파델 무사

지난 10 년 동안 아랍 세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은 튀니지의 도시 시디 부지드에서 시작되었다. 2010년 12얼 17일 지방 자치 단체의 폭력에 분노한 젊은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시골 마을에서 이어지는 민초의 봉기는 2011년 1월 14일에 수도 튀니스에 도달하여 공화국 대통령을 망명보내고 정권을 몰락시켰다. 시위대는 "일, 자유, 존엄성"을 요구했다. 이렇게 자스민 혁명이 탄생하여 아랍의 봄을 일으켰다. 권위주의, 부패, 빈곤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자 승리이다. 영어로 "Never this again"(다시는 안돼)을 의미하는 "Plus jamais ça"는 곧 튀니지에서 신조가 되었다.

혁명 10 주년 전날인 2014 년 1 월 27 일 채택된 튀니지 헌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우리 튀니지는 교훈을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권리와 자유에 관한 장에서는 강화된 보증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시민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및 환경적 권리도 강화시켰다. 또 다른 장에서는 지방 분권의 강화, 국토 전역에서 지방 정부의 주류화, 지방 정부의 "자유(또는 자율) 행정" 부여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선거법은 지방 자치 조직을 위한 독립 기구를 포함하여 지방 정부에 대한 민주적 시스템을 보장했다. 또 다른 기본법과 기타 실행 지향성 문구를 통해 튀니지에 이전의 법체계와 단절하는 현대적 법체계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법적 기구를 완성하였다. 튀니지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적 지방 선거가 2018년 5월 6일에 시행되면서 지방 정부에 필요한 민주적 기능과 새로운 정신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시민/정치적 권리가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권리가 어떻게 동등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지 볼 수 있다. 가난한 도시뿐만 아니라 가난한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전체에 사회적 불안이 지속된다. 그러나 민주 혁명 이후 오랫동안 기다렸던 존엄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일반적인 실망"의 결과로서 최근에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다시는 안돼" 신조와 모순되는 구체제에 대한 어떤 유감스런 감정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교훈은 계속 변한다. 현재 부족하고 "포용,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내러티브와 이해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개발과 경제 발전의 지렛대로서 "도시"를 번창시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도시와 평등법

국가인권위원장
최 영 애

도시의 모든 운영이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이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차별없이 권리를 누리고,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인권도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도시 구축은 보편적 인권 이념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역 차원에서 실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인권도시'를 적극 추진하고 포괄적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선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 사실 부정, 특정지역(호남)이나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혐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표출되었다.

이러한 혐오의 정치, 그 뿌리가 되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사회를 운용하는 핵심 원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평등법이 있다면, 적어도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인식을 사회가 공유하게 된다.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잠재적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평등법을 통해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평등 증진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기 때문에 평등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증진 의무를 법제화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된다. 평등법은 지역 인권제도와 인권도시를 구축하고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 시장
비마 아랴 수기아르토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도시:
역사적 경험을 통한 사회적 불안정 해소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
클라우디아 로페즈 에르난데스

역사적 기억의 역할과 우리 도시, 특히 전 세계적 유행병, 기후 비상사태, 집단 동원 및 사회적 항의,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의 축적된 요구가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는 우리 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보고타(Bogota)에서 우리는 옛 FARC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이제 60년 된 무력 충돌을 뒤로하고 우리나라 평화와 화해의 진원지가 되는 과거의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현재로부터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며 사회적, 경제적 격차, 특히 여성과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극복을 위한 도시 화해에 많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도로 진정한 경찰 개혁을 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도시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용서, 진실과 화해를 구축하도록 확실히 이끌 것입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권>

도시권: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강화 및 관점전환

도시권 (Right to The City)의 의미에서, 도시와 인간 주거지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유익하게 활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시급한 몇 가지 과제(사회적 불의, 불평등, 공간적 분리, 차별 및 환경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연구자들과 연관 단체들 간의 지식 교환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인 노력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넓은 시야로 도시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지역적인 측면에서 실제 적용에 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매우 복잡한 도시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 도시의 시민들은 실제로 항상 존재해 왔지만 유행병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들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도시를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숙고하고 재구상하기에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현재는 시민사회의 강화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권이라는 주제는 복잡한 도시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과 정책 개발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은 지난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의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인권의 핵심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항들은 도시권 (Right to The City)에서도 공유되는 가치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파악되는 개념이 도시권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러한 가치의 홍보와 광범위한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아시아는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화를 경험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도시들이 직면한 과제를 통해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권 (Right to The City)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는 현재 아시아 4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및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도시권 의 실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 결과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사안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파악된 내용들을 프로세스들 간에 서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인권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인권의 관점 변화는 시민 사회를 강화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연구자가 아시아의 기후 변화, 유행병 이후의 도시 개발, 주거 및 도시 정주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주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추진될 협력 방안과 다음 단계의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권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체회의2>

세계인권도시 운동의 미래

배경:
1997년 맨 처음으로 인권도시를 선언한(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이래로 전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 프레임워크를 지방자치의 의제로 수용하였다. 여러 지역에서 선도적인 도시나 마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긴급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있어 변혁에 초점을 두고 권리에 기반한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전세계적인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실제로, 지방정부의 대책은 도시 관점에서 인권 분야의 도전과제와 우선순위(양성평등, 비차별,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 평화를 중시하는 문화, 참여 민주주의, 공공재, 이민자 수용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면서 지역 이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들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인권의 실현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였던 지방정부들은 공공서비스와 공공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인권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법"과 "지역화"의 개념을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the global network of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2011년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UCLG 2016-2020 의제에 도시의 권한을 명문화하는데 이르렀다.

현 상황:
2015년부터 UN인권이사회는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후 세계지방정부연합과 그 산하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함께 첫 지방정부 대표 회의를 함께 주관하였고, 이 자리에서 "인권도시" 운동의 강화와 확대가 논의되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10주년이자,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이번 세션에서는 2020년 9월에 채택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의 틀 내에서 지방정부 대표 간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국제 인권도시 운동의 미래를 논의하고, UN 인권체계에 보다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세션 목표:
1) UN 인권위원회의 차기 결의안 프레임워크 공유와 향후 2년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네트워크, UN 인권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
2) 2021년, 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의제' 채택 10주년 관련 헌장 개정 가능성 논의

회 의 일 정 <10/08>

12:30~15:30	**T1 사회적경제**	48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주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회	좌장 **이정일** [한국]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	
발제	**류광수** [한국]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온라인 중계
	김재경 [한국]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곽 로렌스 [프랑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무국장	
	최혁진 [한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토론	**장민영** [한국] 광주광역시 마을기업연합회 회장	
	윤봉란 [한국]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12:30~15:30	**S2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53쪽
공식언어	한국어, 문자	
주제	전환기적 정의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국가폭력과 미완의 과거청산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회	좌장 **정민구**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발제	**임재성** [한국]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온라인 중계
토론	**주철희** [한국] 역사공간 벗 연구원	
	정구도 [한국]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희송 [한국]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교수	
	서창호 [한국]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양정심 [한국]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실장	

12:30~15:.30	**S3 글로벌 청년 주거권 회의**	55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COVID-19 시대의 글로벌 주거권 현황 분석 및 청년 맥락에서의 재정의	
주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개회	**이하영** [한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기조발제	**홍정훈** [한국]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발제	**백경하** [한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온라인 중계
	김인영 [한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이하영 [한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발표	**줄리에타 페루카** [캐나다] 쉬프트 부대표	
	라파엘 오본요 [케냐] 청년의회 대표	
	애나 카리나 버넬 [에콰도르] 유엔해비타트 프로그램 애널리스트	
	데즈리 카메카 갤로웨이 [미국] 매디슨하우스 자폐재단 주거네트워크 국장	

회 의 일 정 <10/08>

13:00~17:00	**S4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60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문자	
내용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	
주관	광주트라우마센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개회	좌장 **최정기** [한국]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김성례** [한국]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팡롱 쉬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대만연구프로그램 공동책임자	
	화위안 쉐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교수	온라인 중계
	요시히사 아마에 [일본] 대만 장영대학교 부교수	
	노용석 [한국] 부경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도린 버내스 [아일랜드] 건축협회 도시프로젝트 강사	
	스타브룰라 세로지아니 [그리스] 홍콩중문대학 선임강사	
	명지원 [한국]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리사 헨리 [미국] 국제고문생존자재활협회 사무총장	
	정근식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3:00~19:00	**S5 인권논문발표**	67쪽
공식언어	영어	
주제	인권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기후에 대처하는 건강한 도시 건설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과제	온라인 중계
주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광주국제교류센터,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 연구단	

세션1: 지역 차원의 인권과제 다양성

개회	좌장 **로버트 그롯존** [미국] 전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발제	**샤나와즈** [파키스탄] 5·18 기념재단 국제인턴
	브렌든 칼레가리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씨재르 오똘리니 [이탈리아] 국제주거연맹 코디네이터

세션2: 지역 거버넌스의 제도적 발전

개회	좌장 **김성훈** [한국]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발제	**앤드류 월만** [미국] 런던대학교 강사
	안디 오마라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조슈아 쿠퍼 [미국] 하와이인권연구소 소장
	이르마 마리솔 에르난데스 [엘 살바도르] 세이브더칠드런 프로젝트 매니저

세션3: 코로나 시대의 공동체 정신 유지

	좌장 **김연민** [한국]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마분 하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인권개발센터 소장
	쟈넷 다우티 [뉴질랜드] 왕립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잉그리지 레이리아 [브라질] 고려대학교 미시계량경제학 박사과정
	도미니카 사도브스카 [폴란드] 폴란드인권기업연구소 정책전문가
	베아타 파라치크 [폴란드] 폴란드인권기업연구소 이사회 의장

회 의 일 정 <10/08>

	세션4: 인권 및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개회 발제	좌장 **알레한드로 푸엔테즈** [아르헨티나]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이세 존** [파키스탄] 고려대학교 국제개발 박사과정 **마쿠스 뫼스티** [오스트리아] 지방및지역수준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센터 선임연구원 **클로이에 모르티** [스웨덴] 룬드대학교 개발학부 석사과정 **딕시에 고탐** [네팔] 룬드대학교 개발학부 석사과정 **우낭 물칸** [인도네시아] 람풍대학교 지속가능발전목표센터 소장	온라인 중계
13:30~15:30	**N3 차별금지 회의**	68쪽
공식언어 주제 주관 개회 발제 발표	한국어, 문자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국가인권위원회 좌장 **정문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한국]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완** [한국]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 **이승현** [한국] 연세대학교 강사 **박한희** [한국]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온라인 중계
15:30~17:.30	**S6 해외인권정책회의**	71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한국어, 영어, 문자 부패퇴치 및 인권강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주한 스웨덴 대사관 좌장 **야콥 할그렌** [스웨덴] 주한 스웨덴 대사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라울벨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 **김수아** [한국]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서철모** [한국] 화성시장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 이즈타팔라파 시장 **피겐 카라한** [터키] 이스탄불시의회 의원 **세실리아 벨린** [스웨덴] 스웨덴 지방당국및지역협회 선임고문관 **알리 임란** [파키스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파키스탄지부 팀장	온라인 중계
16:00~19:00	**T2 환경**	79쪽
동시통역 순차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문자 일본어 핵발전소와 인권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좌장 **배정환** [한국]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부학장 **아오타 유시유키** [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 **안재훈** [한국]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황분희** [한국] 월성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우** [한국] 탈핵신문 운영위원장 **강언주** [한국]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윤종호** [한국]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	온라인 중계

회 의 일 정 <10/08>

16:00~19:00	**T3 노인**	82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문자 국가폭력 피해 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 (사)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좌장 **양철호** [한국]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데이빗 돌린저** [미국] 광주5·18민주화운동 목격자 **양성주** [한국]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조직위원장 **주철희** [한국] 역사공간 벗 연구원 **김종세** [한국]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정종민**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용주** [한국]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1과장	온라인 중계
16:00~19:00	**N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87쪽
동시통역 내용 주관 개회 발제 토론 토론	한국어, 영어, 문자 SDGs와 인권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방안: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좌장 **박래군** [한국] 인권재단 사람 상임활동가 **벌겟 피어링** [덴마크] 덴마크인권연구소 소장 **한스 사커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국제전략자문관 **박차옥경** [한국]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서미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비상임위원 **박예안** [한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형완** [한국]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윤희철** [한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온라인 중계
20:00~22:00	**P3 전체회의3**	91쪽
동시통역 주제 주관 개회 기조발제 발제 토론 발제 토론	한국어, 영어, 수어, 문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와 인권과제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광주국제교류센터 세션소개 **아만다 마르티네즈** [스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코디네이터 좌장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위** [인도네시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가브리엘라 라모스** [멕시코]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보 **알렉스 워커** [뉴질랜드] 혹스베이 시장 **이재준** [한국] 고양시장 **필리프 리오** [프랑스] 그리니 시장 **수 바이즈** [호주]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고문 **김종효** [한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비제이 사라와기** [네팔] 빌간지 시장 **발라크리스난 라자고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레베카 말레이** [필리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이사회 의장 **주태죽** [대만] 타이페이시 대외실장 **매들레인 알펠로** [필리핀] 이리가 시장 **루시아 베아무드** [스페인] 발렌시아 주 평등·성 정책 및 LGBT 상담전문가 **알리싸 와히드** [인도네시아] 구스두리안 네트워크 국장	온라인 중계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공동체 정신을 중심으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정신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일반적 속성인 호혜, 연대, 참여, 공감, 나눔의 정신은 바로 공동체 정신의 또 다른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같은 목표를 가지며, 개인보다 공동체, 부분보다 사회전체를 중시하는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성은 사회적경제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에 둔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지속가능해 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전과 지속가능성 담보전략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출구전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공정책과 연계하여 나아갈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 공동체정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회적경제 세션을 진행 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 인지 고찰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위해 공동체 중심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

광주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류 광 수

○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경제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나눔의 공동체 경제구조이다.
- 경제활동조직(기업)활동의 잉여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는다.
- 기업활동의 재원과 경험이 지역과 함께한다.

○ 코로나19의 의미
- 경쟁과 독점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 전 인류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확신하게 한다.
- 중앙 중심 밀집과 대규모보다는 지역 중심 분산과 소규모를 지향하게 하였다.
- 생산자(영리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소비자(개인과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 예견

○ 코로나19 확산기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동
- 공적 방역에 솔선수범(지역아동센터 무료 방역)
- 사회적기업-보건당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방역 활동
- 사회적(마을)기업 중심으로 마스크 제작 나눔 활동
- 기타 방역용품(소독제 등) 개발 및 공동체 나눔 및 판매 활동

○ 코로나19 확산기 전국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동
- 대구-경북 확산기 지원 물품(금품) 모금 활동
- 대구 방문 물품 전달 및 간담회 진행
- 코로나19 대응 전국 네트워크 참여(정보 공유 및 기업 방역 활동 지원)

○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노력
-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상품(용역 등) 개발 보급
- 상품 판매 및 보급에서 공동체 지향점 강화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모델에 주체적으로 참여 노력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을 위해 공동체 중심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대응

대구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 재 경

대구에서 2월18일 코로나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한 이후 지역에서의 '소중한' 일상은 멈춰섰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젠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역사회적경제는 출구전략을 넘어 '지속가능한' 장기적 대안마련의 모색에 '함께'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강제하였고, 능동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과 전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도전에 내부적으로는 집단적 토론과 숙의의 방식으로, 외부적으로는 촘촘한 협력, 호혜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를 '좋은' 사회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의 '본연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또다른 경제조직으로의 전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본 발표는 우리의 삶과 사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구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기술한다. 대구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연계를 통해 사회자본이 구축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러한 경로를 거쳐 사회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합적 노력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그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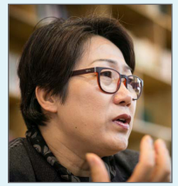
시작은 3월초로, 코로나발생 직후 지역사회적경제조직들은 민관네트워크(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지역별협의체)를 활용, 구체적 피해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민관공동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지원한다. 동시에 개별적으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마스크나 도시락 등의 필수물품들을 발빠르게 전달한다. 사회적경제의 공생의 가치에 부합하는 자발적 나눔 활동이 곳곳에서 시작된다. 대구위기시 대구소재 그 어느 기업도, 기업협의체도 시작하지 않은 일을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장 먼저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개별기업으로 대응하는 나눔활동이 조직적 활동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각 부문별, 지역별 협의체등은 포괄적인 대구사회적경제연대체, 가칭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대구사회적경제코로나19 대책TF팀로 시작한 활동이 수평적 협의에 바탕을 둔, 열린 통합연대체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긴급 당면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미래전략을 준비하는 역할로 자기규정을 하기에 이른다. 대구사회적경제조직들이 소통과 협동으로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간 과정은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접목되는 구체적 사례가 될 것이다.

넓고 수평적이면서도 조직화된 연대 활동의 시작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도 '아래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이 구축해가는 수평적이면서도 협력적 거버넌스시스템이 지역회복력을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공동체가 만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장
곽로렌스

2020년은 사회적경제가 다른 여느 경제영역과 마찬가지로 많은 위기와 도전을 맞이한 해이다. 2020년 1월 첫 COVID-19 바이러스가 중국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아시아 및 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퍼진 지금 2020 년 9 월 6 일 오전 10시 41 분 현재 WHO에 보고 된 COVID-19 확진 사례는 876,152명의 사망자를 포함 26,726,98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이제껏 전례 없는 공중 위생과 보건 및 방역의 위기를 선진국, 후진국의 차별 없이 전세계가 직면하게 했음은 물론 COVID-19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 경제 위기는 이차대전 이후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경제, 산업 및 고용 위기로 발전, 가난과 실업 문제 및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을 망라하며 모든 국가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남은 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 상황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관계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물론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위해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경제와 사회(공동체) 및 생태계의 근원적 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시스템 변화가 시급하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돼왔던 금융과 재정위기를 넘어 전 세계를 다시 혹독한 경제 위기로 몰아놓은 이번 위기 역시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위기로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됐던 세계화와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물론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한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음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 위기가 가져온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단순한 생태적 한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패러다임의 방향 설정과 주도적 역할을 할 중요한 변혁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번 COVID-19 팬데믹 위기 대응에서 보았듯이 동·서양을 아우르며 연대, 호혜, 적극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필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정부와 시장의 실패에 대안적으로 나섰던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중요성에 주목하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방역 대응과 경제 살리기 사이에서 강한 회복력(Resilience) 및 보호력(Protection), 호혜력(Reciprocity)의 유기적 구축과 경제적 효율성 확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새 패러다임이 왜 글로벌 가치 사슬로 묶인 시장이 아닌 지역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순환지역경제시스템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이 구축돼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현 코로나 위기 속 지구촌 모든 나라가 마주한 중대한 도전의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는 이유다.

이 쉽지 않은 숙제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과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 새로운 변화가 무한대이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금융과 글로벌 가치사슬로 주도되는 신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순환과 회복, 호혜적 관계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전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최 혁 진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머지않아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다양한 치료와 예방기법의 개발과 축적이 이루어 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코로나의 배후라 여겨지는 기후위기와 이를 유발한 현대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이다. 그때까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이 일상처럼 우리를 엄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동체성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로컬 단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와 경제적 기반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모두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의견들이다.

다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동체가 지닌 양면적 성격을 항시 고려해야 한다. 얼굴이 보이는 서로 돕는 관계의 그물망이란 긍정적 성격도 있지만 한편으로 위계적이고 폐쇄적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관계의 장이란 성격도 지니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시대의 화두 즉 '불평등과 격차'의 축소판으로서 공동체를 경계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공동체의 전망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공동체 간의 연결망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공공에서 시작된 사회적 가치 실현의 흐름은 제 사회섹터간의 공유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공동체 정신의 근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확산되는 사회적경제는 로컬 단위의 경제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공동체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참여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거대한 연결망이 아름다운 대안이 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기억도시 네트워크>

전환기적 정의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국가 폭력과 미완의 과거청산

한국은 일본 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수십 년에 거친 국가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5·18 민주화 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고,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 김대중 정부 들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과거청산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의 과거청산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 정권하 전환기적 정의를 위한 노력은 크게 뒷걸음질쳤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입법발의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특별법의 제·개정안은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과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제주4·3과 같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4·3특별법의 경우처럼 배·보상 제한뿐 아니라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70여년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등 과거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책임자 처벌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화해가 아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이 절차적으로 완성되는 전면적인 제·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모든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이자 국제적 의무에 해당한다.

'전환기적 정의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계기로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와 교류·연대하고, 올바른 과거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성·운영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이를 통한 책임자처벌, 배·보상, 정신계승 등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의 경험을 공유·축적하여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한편, 나아가 아시아는 물론 유엔 등 국제인권레짐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는 어떻게 '폭력'을 넘어서는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임 재 성

과거사청산은 "처벌과 배상이라는 얇은 청산이 아니라, 제도 개혁과 문화적 구축을 포함한 '두터운' 청산"이어야 한다. 과거사청산은 전환기(이행기)에 한정된 실천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한 지속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문은 과거사청산이 완결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도시의 역할을 검토한다.

제주4·3과 관련된 최근 과거사청산 활동에서 4·3특별법 개정운동과 4·3 시기동안 불법적인 절차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운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둘은 입법과 사법의 영역이었기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즉 도시가 개입하거나 참여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별도의 지역 과거사기구(제주4·3평화재단)가 존재하기에 도시라는 주체를 확장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진상조사의 역할을 넘어선 입법과 사법운동에서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보상을 받아야 한다. 배·보상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고, 위법한 체포와 고문으로 이루어진 판결이 있다면 재심으로서 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최우선의 목표임에는 분명하고, 제주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과거사운동 역시 특별법 입법, 또한 개별 재심의 방식으로 권리구제 운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재판의 주체 모두 '국가'인 상황에서 '도시'의 역할은 무엇일까?

최근 제주4·3 재심운동에는 '제주4·3 재심 재판 시민방청단' 운동이 등장했다. 재심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열리는 재판에 방청하는 운동이다. 발표자는 이 활동에서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국가와, 입법적 사법적 절차로서 국가의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구도 속에서 도시가 '운동'의 목격자, 기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었다.

많은 도시가 과거 국가폭력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과거사청산은 일제시기 3·1운동을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 생존피해자의 현재적 요구와 권리주장이 있고, 이를 둘러싼 권력과 제도의 변화가 바로 이 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폭력의 현장을 품고 있는 도시는, 그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시점에서의 도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운동의 목격자, 기록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운동을 기억하는 것은, 폭력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억하는 것이다. 도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청산 '운동'과 연대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기록과 목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플랫폼과 자원을 투여하는 역할 속에서 '기억도시'가 논의될 수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주거권 회의>

COVID-19 시대의 글로벌 주거권 현황 분석 및 청년 맥락에서의 재정의

□ 배경

UN-HABITAT는 전 세계 도시와 인간정주를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와 도시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에서 '주거권'의 핵심개념으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단순 주거 공간 개념뿐만 아니라 기초 서비스의 접근성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역설. 특히 COVID-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주거권 침해 회복을 위해 100여개 국가에서 주거 향상 프로젝트 진행 중

주거권(Right to Housing)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반면, 이에 대한 인식 수준은 현저히 낮음.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대상이자 주체로서 주거권에 대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

특히 COVID-19 사태로 인해 청년층은 이 권리에 대해 취약층로 분류될 만큼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음. 경제 · 사회적 자립을 이루지 못한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국제 사회의 재난은 특히 '주거 안정성' 차원과 '생활 전반적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

※취약하고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에 대한 노출 뿐 아니라 주거에 대한 손실로 인한 무주택자로의 계층적 전환 악순환 발생

□ 목적과 방향성

COVID-19 시대의 글로벌 주거권 현황 분석 및 청년 맥락에서의 재정의(립)

COVID-19로 인한 주거권 침해 사례 조사 및 해결책(대안) 제시

글로벌 청년 세션을 통해 전 지구적 주거권 현황 및 이슈에 대한 공유, 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주거권 옹호 역할 강조

주거권에 근거한 청년 주도의 인권도시 미래 비전 제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글로벌 청년 연대구축

팬데믹 극복을 위해 노숙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 정 훈

세계 각국의 정부는 COVID-19 상황 동안 사람들에게 집에서 머물기를 요구하고 있다. 거리에서 잠을 청하고 비공식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노숙자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보다 더 고통받게 된다. 집은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지만, 많은 정부들이 노숙인들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적절한 주거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심지어 몇몇 긴급 쉼터조차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문을 닫았다. 고시원, 쪽방촌 등 비공식 주거지는 이미 초만원이며, 기본 공공서비스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표준 이하의 위생 시설은 이전에 비공식 주거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많은 세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개월 분의 임대료가 체납되면 퇴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 정부와 법원은 임대료 체납에 대한 모라토리엄(지급불가)을 제정하였지만 대부분 곧 만기가 다가온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긴축정책을 펼칠 지 모른다. 이는 무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가구에 주택연금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확대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2018년 재산세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대부분 근로자들의 수입이 팬데믹으로 인해 줄어든 반면, 투기 목적으로 주거형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많은 이득을 벌어들였다. 주택 공급의 어려움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국회는 팬데믹 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차 계약 최소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임대료 지불을 위해 애쓰는 세입자들을 위해 퇴거를 막아주고 주택을 공급하기엔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기성세대는 실패했다. 주택은 생명권이지 상품으로 여겨지면 안된다. 정부가 주택관련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악화될 수 있다. 불평등은 노숙자들과 청년들을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고 우리 사회를 지속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뿐 아니라 노숙인 해결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뿐 아니라 노숙인 해결을 위한 주거 전략 또한 필요하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의 경제 불안과 주거권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백 경 하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말이 있지만, 모두가 똑같이 연약하지는 않다. COVID-19를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영향력은 사회에 불균등하게 분산되며 기존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비록 사회안전망이 없는 많은 집단이 다양한 측면에서 재난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어려움을 듣기를 원하고 듣고자 계획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는 '집에 머물라'는 단순한 생각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행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청년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임대료는 자연스레 더 이상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되며 고용을 기반으로 한 주거기회는 사라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집이 없는 청년들은 종종 월간 혹은 주간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시 퇴거해야 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집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주거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하나의 문제이지만, 청년 시절의 경험을 낙인찍는 것 또한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장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COVID-19 발병 이후 청년들에게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들은 이들이 신뢰할 수 없고 독립적 생활에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금(보증금) 손실의 위험이 올라가고 세입자 퇴거를 방지하는 정부 정책에 직면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재정적 안정을 얻는 것이 이미 청년들에게는 큰 장벽이지만, 이들이 애써 구축한 재정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역시 이들이 겪어나가야 할 또 다른 임무이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년 노숙은 계속하여 파괴적인 방향으로 발현되고 있다. 격리 지침과 함께 COVID-19에 대한 공포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기회는 카우치 서핑(couch surf : 무료로 누군가의 집에 신세지는 것)이나 긴급 공공쉼터에 머무는 것으로 제약되고 있다. 청년들은 고령의 노숙인들로 분류되지 않기에 노숙인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로 적절한 형태의 지원이 박탈되기도 한다. 심지어 청년들이 '집에 있으라'는 행정명령에 따르지 못해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COVID-19 상황에서 가뜩이나 취약한 청년 세대와 그들의 주거권은 위기에 처해 있다. 팬데믹의 많은 영향들 중에서, 경제적 불안은 특히 청년들을 결손의 절벽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주거권과 관련한 청년 건강 문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김 인 영

불확실성의 늪에서 청년들은 주거권을 빼앗기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다. 적절한 주거 부족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건강과 위생 면에서 더욱 취약하게 되는데, 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삶의 질과 웰빙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 년간, 많은 연구자들이 기준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과 같은 만성적 건강 문제가 만연함을 발견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기저 건강문제는 만성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COVID-19에 접촉하였을 때 합병증에 위험에 처하게 한다. 또한, 노숙자들에겐 규칙적으로 손을 씻고 적절한 위생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주거 불평등은 대유행과 결합하여 불충분한 주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또한, 사회경제적 면에서 가난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한 생활 환경은 수 백 명의 타인과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하며 질병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킨다.

위에서 언급한 부적절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만성적 질병과 사망률 증가와 더불어, 취약하고 이미 소외된 청년들 사이에서 더 많은 비율로 심리적 고통, 우울증, PTSD, 불안 등이 발견된다. 수 개월의 팬데믹 기간 동안 청년들은 빈곤 악화와 혜택 및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제로써 자살시도, 마약, 알코올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부족했던 청년 주거 인프라에 대한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다. 젊은이들의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을 얹음으로써 COVID-19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COVID-19를 홀로 직면하도록 놓여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실무그룹 활동가
이 하 영

COVID-19의 발병은 삶의 거의 모든 층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팬데믹이 종종 건강 문제로만 여겨지고 있지만, 이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의 다른 많은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일례로, COVID-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부는 자가격리, 개인위생, 집안에서 머무르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적절한 쉼터나 집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이행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주거는 COVID-19의 예방책이자 치료제"라는 아이디어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있다. 주거가 실제로 이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보장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주거 문제를 대유행의 결과이며 동시에 대유행에 기여하는 이유로 다루기 위해 '권리 기반의 해결책'을 강조한다. 현 주택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 수요와 구조적인 불평등을 동시에 다루지 않고서는 장기적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적절한 주거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특정 집단과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LGBTQ, 여성, 아동, 장애인, 노숙인, 난민, 빈민가 주거인, 이민자, 원주민 등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차별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취약한 주거환경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기에, 주거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기본권 행사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지워졌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COVID-19 상황 동안 위태로운 상황에 남겨진 채, 소수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행동은 쉽게 구석으로 밀려난다. 반면, 정부가 주도하는 대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영향받고 취약한 사람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적인 사람들(요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팬데믹이나 전지구적 위기가 COVID-19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불확실한 환경이 왔을 때 다른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형성할 것이며,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고 살게 될 지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 줄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

세계사적으로 20세기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근대국가 형성기에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들과 사회에는 트라우마가 생겨났다. 장기간 지속된 희생과 트라우마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민주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이행기 정의적 해결 방식이라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행기 정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국가폭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그리고 치유적 관점에서 이행기 정의"라는 주제로 한국, 대만, 그리스, 독일, 멕시코의 이행기 정의 노력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더 나은 이행기 정의 방식과 트라우마 치유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 트라우마의 전승과 의례적 매개

제주4·3항쟁과 학살의 포스트기억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 성 례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냉전체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살상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집단적 죽음으로 인한 사회의 파괴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결과하였다. 제프리 알렉산더는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트라우마와 구별하여 '문화적 트라우마'라고 정의한바 있다. 캐서린 버더리(Katherine Verdery)는 The Political Lives of Dead Bodies (1999)에서 1990년대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냉전시대 소련치하 동유럽에서 집단살상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안장과 같은 위령의례가 활발하게 전개됨을 '시신의 정치학'으로 해석한 바 있다. 희생자의 시신과 유골은 물질적 증거로서, 살상의 책임과 처벌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야기하는 정치적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시신의 윤리적 속성은 집단살상의 희생자 가족과 친족,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트라우마의 기억과 전승 작업을 통해 활성화된다. 본 글에서는 냉전체제의 대량살상에 대한 '트라우마 기억의 작업'(the work of traumatic memory)으로서 일련의 위령의례의 매개양식-제사, 굿, 장례와 매장에 주목한다. 2020년 72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은 냉전체제의 폐허로 남아있다. 대량살상의 희생자 영령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시왕맞이굿과 조상제사와 같은 개별 가족의례와, 제주공항 유해발굴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시신의 장례와 재매장과 봉안관 안치 등 공적인 차원의 위령의례에서, 4·3희생자의 죽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제주 4·3사건의 트라우마 기억을 전승하는 위령의례는 마리안느 허쉬(Marianne Hirsch)의 포스트-메모리이다. 포스트-메모리(기억)은 "강력한 정서적인 힘(affective force)으로 기억의 구조와 기능을 소환하는, 세대간의 혹은 세대를 넘어서 전승된 기억의 유형"이다. 제주 4·3의 경우, 포스트-기억의 중심 매개체는 애도와 기억의 재현을 혼합한 위령의례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이후 가능해진 4·3의 공식적인 위령제 활동이 전개되기 이전부터 제주의 심방(샤먼)은 영혼의 접신을 통해 대량살상의 기억을 환기하고 개별 가족단위로 전승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2년부터는 심방들이 제주도 4·3희생자유족회와 함께 집단살상 현장을 찾아 시행하는 제주4·3해원상생굿은, 집단암매장터의 유해발굴과 공식적 봉안관 안치와 더불어 문화적 트라우마를 전승하는 제주 지역공동체의 공적인 "윤리적 실천"이다. 본 글의 목적은 제주 4·3의 문화적 트라우마의 전승과 관련하여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죽은 자와 시신에 대한 문화적 믿음과 도덕적 관념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있으며, 또한 서로 영향을 주는지 의례적 경합의 정치학과 윤리적 실천을 탐구하는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의 '수동적 희생자'로부터 '적극적 수호자'로 변신하게 되는 대만의 1952년 루쿠사건의 재조명

런던정치경제대학 대만연구프로그램 공동책임자
팡롱 쉬

이 논문은 대만의 루쿠사건(鹿窟事件)에 대한 다양한 기억과 내레이션에 따라 "전환기 정의" 담론의 변화하는 패러미터(parameter)를 고찰한다. 대만의 2·28학살은 흔히 한국의 제주 4·3학살에 비견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제주 4·3은 7년 7개월(1947.3.1 ~ 1954.9.21)에 걸쳐 일어난 '반공' 탄압인 반면, 대만 2·28은 단 2개월 17일(1947.2.28 ~ 1947.5.16)에 걸쳐 발생한 종족 분규에 대한 억압 조치였다. 제주 4·3에 대한 '반공주의'와 기간(time-frame)에 관한 적절한 비교 대상은 2·28사건과 그 뒤에 발생한 루쿠사건의 '반공' 탄압의 조합이어야 한다. 이 두 사건의 발생 기간은 1947년 2월 28일부터 1953년 3월 3일까지이다. 또한, 제주 4·3과 루쿠사건은 냉전 발발 초기에 각각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발생한 '이념 갈등'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2·28사건과 곧 이어 터진 루쿠사건은 장개석의 지도 하에 이른바 "자유 중국" 정부(국민당)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백색 테러"(1947~1991)와 계엄령(1949~1987)을 강행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시기는 또한 대만 국민이 국민당의 신식민주의에 맞서 민주적 개혁을 위해 싸우던 시기이기도 하다. 루쿠사건은 가장 가혹한 진압 사건이었다. 약 1,000명의 루쿠 주민이 체포되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서 총에 맞았으며 41명은 사형을 선고받아 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135명은 도합 약 천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86년 주요 야당(민주진보당, DPP)이 창건된 이듬해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대만은 뚜렷한 민주화를 겪었다. 리덩후이가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2·28과 백색공포의 국가 폭력과 되풀이되어 자행되던 불의의 진상을 정식으로 다루어야 했던 1990년대까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전환기 정의의 추구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작업이 포함된다. 첫 번째는 가해자를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당이 12년 동안 계속 통치하면서 가해자를 재판장에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대만의 사례를 적절히 표현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수만 명이지만,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6년(1990~2016년) 동안 3명의 총통들(국민당 리덩후이, 민주진보당 천수이볜, 국민당 마잉주)은 '사실 확인'을 하고,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고, 기념비를 짓고 희생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차이잉원이 2016년 총통으로 선출되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진보당이 입법부의 과반수를 차지한 이후,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정의의 변혁을 추진함으로써 마침내 '전환기 정의 법안'이 2017년 12월 27일에 제정되었다.

※ 이하 중략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아요치나파(Ayotzinapa) 43명 실종사건의 진실과 그 의미

부경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노용석

2014년 9월 26일, 멕시코 게레로주 이괄라 시의 아요치나파 사범대학교(Las escuela normal rural de Ayotzinapa) 학생들이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한 거리 기금모금과 정부지원 확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버스 등을 훔쳐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1926년 개교한 아요치나파 교육대학은 예전부터 급진적 학생운동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다. 충돌과정에서 사범대학 학생 6명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43명의 학생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초기에는 당시 이괄라의 시장이었던 호세 루이스 아바르까 벨라스케스(José Luis Abarca Vel zquez)와 그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데 로스 앙헬레스 피네다(María de los Ángeles Pineda) 등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2014년 11월 7일 검찰(La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ública)은 게레로 주 꼬꿀라(Cocula)의 비밀구덩이에서 43명 실종자와 연관된 살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검찰은 43명의 실종자들이 이괄라와 꼬꿀라의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후 갱단인 게레로 우니도(Guerreros Unidos)에게 시체가 인계되었다고 말하였다. 학생들의 시체는 모두 소각되었고, 이후 유해를 비닐 봉지에 넣어 인근 강물에 유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이후 드러난 사실은 이 사건에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멕시코의 권력체계가 개입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2020년 현재까지 43명 실종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극복이 어떠한 수준에 놓여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요치나파 43명 실종사건은 단순히 멕시코 국가폭력의 현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1960년대 이후부터 청산되지 못한 국가폭력의 후유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43명 실종사건은 1968년 '멕시코 68운동'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68운동 5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멕시코 중앙광장 소칼로(Zócalo)를 가득 메운 군중들이 청산되지 못한 1968년 틀라텔롤코 학살과 43명 실종사건을 연계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완치를 외쳤다. 1968년 10월 2일 뜰라텔롤꼬(Tlatelolco) 위대 1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한 멕시코 군대의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 공격은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구스따보 디아스 오르다스(Gustavo Díaz ordaz) 직할 '올림픽 대대' 군인과 정규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헬기 기총소사로 2백 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의 학생운동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멕시코에 있어서 1968년은 멕시코 혁명 이후 구가해오던 여러 가지 멕시코의 이미지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까지 멕시코인들은 그들이 라틴아메리카의 리더이자 대륙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했었다. 실제 멕시코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경제 부흥을 맞이했고, 엄청난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멕시코 발전의 그늘에는 마초적 정치분위기를 중심으로 한 획일화된 국가권력 체계가 있었고, 이 체계는 1968년 대학살을 자행하면서 2020년까지도 권위적 국가폭력이 멕시코에서 기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발생한 아요치나파 43명 실종자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 사건의 기저에 깔려 있는 멕시코 국가폭력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영역은 멕시코 68운동과도 연관성을 가지므로, 멕시코 68운동이 국가폭력 구조의 성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 장벽 허물기

건축협회 도시프로젝트 강사
도린 버내스

1961년 베를린에 갑작스럽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워진 물리적 장벽은 이미 파괴와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도시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내고 그것을 짓이겨 놓았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베를린이 통일독일의 수도로서 다시 일어선 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은 폭력적 장벽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신속하게 제거하려는 움직임에 의하여 추동 된 각종 기념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기념물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적 의무로 인식되며, 또한 물리적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베를린 시민의 기억과 정체성에 남겨진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분단의 역사에서 나뉘어진 독일 국민간 사고방식, 이념 그리고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는 "타자"에 대한 거부감, 지역주의 정치와 투표관행, 극단주의와 인기영합주의 형태로 오늘날에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회복의 속도는 장벽 허물기만큼 빠르지 않았다. 장벽과 그것을 "허무는 일"은 도시의 전환기 과정에 일부로서 허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요소로서 기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반면, 공유된 역사에 대한 자발적, 비자발적 회상은 공유된 현재의 화해를 위하여 더욱 공고한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거 분단되었던 도시의 "부정적인" 물리적 요소로 인식되는 장벽으로부터의 의도적 회피 그리고 사물, 공간, 명칭, 복식, 이미지 그리고 물리적 환경에 내재될 수 있는 부정적인 대중의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저 평범하고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장벽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창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긍정적, 합리적인 화해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빠르게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합리화-후, 권위적 역사에서 도구화된 허울뿐인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에 대항하는 "재기억의 비장소(non-sites of re-memories)"를 통하여 "장벽 허물기"의 대안을 추적한다. 과도기적 장벽 허물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상호 연계된 요소로 검증되었다: 1) 베를린장벽의 붕괴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과 독일내부에서 지속되는 문제로서 분단이 야기한 문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베를린장벽 이후의) 장벽; 2) 필연적으로 베를린장벽의 기억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잇는 것으로서 장벽 위, 하부, 그리고 내부를 통과하는 터널이 간직한 이야기; 3) 베를린의 도시정체성과 과거와 현재 간 개발계획 사이의 무시와 조정을 관계를 보여주며, "개방형 건축(open architecture)" 개념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장벽해체, 장벽분리 그리고 장벽설치 반대; 4) 마지막으로 베를린장벽 붕괴 후 20년 동안의 "기억의 장소"와 "재기억의 비장소"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과 갈등을 추적하는 장벽설치 전, 장벽설치 후 그리고 장벽설치 중 이야기. 기억에 대한 학습해체(unlearning)과 한계에 대한 해체를 통한 타인의 살아있는 공통의 기억으로서 삐에르 노라(Pierre Nora)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비판, 에스라 아칸(Esra Akcan)가 기틀을 잡은 "개방형 건축" 접근법, 아리엘라 아이샤 아줄레이(Ariella A sha Azoulay)가 제안한 "잠재적 역사"의 개념은 민주적 전환기의 시점에 도적적, 사회적 심리의 표현 속에서 부정적 대중감정의 역할에 관한 미하엘라 미하이(Mihaela Mihai)의 관점 그리고 샹탈 무프(Chantal Mouffe)와 도나 헤러웨이(Donna Haraway)가 주창한 동종의 정치와 열정의 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연계되는 베를린의 과도기적 장벽해체를 설명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내전으로부터의 목소리들

홍콩중만대학 선임강사
스타브룰라 세로지아니

그리스 내전은 그리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시기에 연합국이 외국의 내정에 개입한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다. 그리스 내전은 1946~1949년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부군과 그리스 공산당 및 그리스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불가리아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리스 민주군 간에 발생한 무력 충돌을 일컫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징후는 독일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던 시기인 1942~1944년에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강력한 공산주의 주도 저항 운동(The Greek National Liberation Front, 그리스 민족해방 전선, 이하 EAM)이 등장하고 1943년에는 이로부터 모든 비(非)공산주의 운동이 제거되었다. 같은 해에 그리스 협력 정부와 나치 동조자들이 지원하는 보안 대대가 EAM 군대와의 전투를 위해 구성되었다. 1944년 독일군 철수 이후 영국이 지원한 카이로의 망명 정부가 아테네로 돌아왔을 때에 EAM 소속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보복이 가해졌다. 이로 인해 1949년까지 계속된 본격적인 내전이 발생했다. 트루먼 독트린과 소련으로 부터의 지원 부족, 티토와 스탈린 간의 분열은 공산당의 패배로 이어졌고, 이로부터 공산당은 1974년까지 불법이 되었다.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간의 폭력적 대결은 전후 그리스의 사회정치적인 상황에 커다란 궤적을 남겼으며, 이러한 현상은 1967년까지(이 시기에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여 1974년까지 이어짐) 지속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시기와 전후에 형성된 정치적인 정체성은 오늘날까지 그리스의 정치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람들(그들의 친척들은 직,간접적으로 내전에 연루되어 있다)의 평범한 삶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역사'[엘레이(Eley), 1989; 포트(Port), 2015] 방식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고, '좌파', '우파', '민주주의', '자유'와 연관된 지배적인 내러티브와 범주에 변혁을 가져온 그들의 일상적 관행, 신념, 가치, 딜레마에 주안점을 두었다. 필자는 사람들이 타인의 친밀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기억과 집단적 기억에 적용하는 서로 다른 시공간과 방식 간의 변화하는 관계와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생 이야기를 끌어낸다. 여기의 이야기들은 기억 연구에 대한 "다(多) 방향" 또는 "연결" 접근법에 대한 마리안느 허쉬(Marianne Hirsch)의 작업을 환기시킨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찰한 바 있다. "우리의 기억은 동적으로 상호연관되고 상충되는 역사들이 여러 방향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이라 하기보다는 그러한 역사들이 항상 이미 합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Marianne Hirsch, 2012: 21). 이러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필자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Svetlana Alexievich)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감정의 역사 속에 끼어들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치유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
명지원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수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됐지만 가해자였던 국가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로부터 학살·고문과 같은 폭력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경험한다. 가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낙인과 격리 정책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만성화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 때문에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은 고문·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가학행위로 인한 후유증보다 이후의 감시와 통제, 사회적 낙인, 진실의 왜곡과 폄하에서 오는 2차, 3차 트라우마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한 광주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가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 5·18 관련자들의 자살로 5·18 트라우마가 재조명되었고 피해생존자들의 정신건강 및 치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뒤늦게나마 치유를 위한 센터가 설립됐다. 센터는 트라우마 후유증 치유를 위해 상담, 예술치유 프로그램, 신체적 후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증언치유 프로그램 등 10여 개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치유의 인문학 등 공동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가 치유를 향해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크고 빠르게 2차, 3차 가해가 생존자들을 쓰러뜨리고 있다.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고 가해자인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하며 본인이 5·18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을 매일 매 순간 1980년 5월로 돌려보낸다. 이런 현실에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이 아니다. 1980년 5월 광주 도심 곳곳에서 계엄군의 학살과 이후의 탄압을 목격한 시민들 또한 트라우마 피해자다. 트라우마 공동체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5·18을 제대로 알고 평가해야만,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비로소 치유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덴마크 심리학박사 Inger Agger는 고문 등 국가폭력 생존자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인권적 접근방식과 트라우마적 접근방식이 그것인데 인권적 접근방식은 정의의 회복과 정치적 재활을 강조한다. 가해자와 책임 통치자들은 잔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는 처벌돼야 한다. 치유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고 불의와 잔학행위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생존자의 존엄과 인간성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 사죄 등의 근본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고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로소 안전하게 치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전두환 회고록이 사라질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진실과 발포 책임자가 밝혀질 때 비로소 광주와 5·18 생존자들은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의 온전한 치유는 피해자 개개인들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치유공동체로 변화되어야 가능하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논문발표>

"인권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를 위한 포용력있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고, 기후 회복력을 갖춘 도시 건설을 위한 역사적 발전과 현대의 도전과제"

도시가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이 숫자는 2050년경 약 2/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시는 협치 구조에 있어 국가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지역 프로그램 관리 권한을 갖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도시들은 점점 더 이러한 역할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들을 인권도시, 이주민의 도시, 기후친화적인 도시, 혹은 UN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향한 도시로서 포지셔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SDG 11번 목표는 '포용력 있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달성을 목표로 하여 "급속한 도시화를 다루는데 있어 급한 도전과제: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한 적합한 주거와 인프라 문제에서부터 도시팽창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증가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단위에서의 인권 이행을 위한 "인권도시" 개념이 부상하였다. 2011년 광주인권선언은 인권도시를 "지역공동체이자 지역 내 사회정치적 절차 내에 인권이 기본 가치이자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올해 포럼은 "기억과 공동체 -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인권도시가 지역단위에서 전 세계 단위로 공유될 수 있도록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동시에 오늘날 인권도시의 합의에 특별히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의 역사적 기억과 유산을 인권교육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미래 인권도시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인권도시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가? 셋째,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인권 주체들의 책무와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에 더해 이번 포럼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도시의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급작스러운 발발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일상과 습관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의 사회화 패턴과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고 이를 즐기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전투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공중보건 보호와 기본권 및 자유의 존중이라는 상충되는 가치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매일매일의 도전과제와 맞서고 있다. 동 포럼은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에 유행중인 코로나19 전염병을 다루는 데에 있어 도시와 지방정부 및 관계 기관의 역할, 특히 이러한 대처가 주민의 기본권 및 자유 향유에 대해 영향을 주는 방식 혹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받아보길 희망하는 바이다.

<차별금지 회의>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한국사회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신청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들이 일어나면서 혐오가 사회이슈로 촉발되어 확산되었고,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은 사회적 재난의 원인을 특정 집단에 돌리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과 대상 집단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혐오차별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중국동포와 유학생, 특정지역,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표현이 확장되는가 하면, 국제적으로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에게 향하는 혐오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해도 괜찮다는 경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연하게 인정하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재난과 함께 드러나는 혐오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재난과 혐오차별 선동에 우리 사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불합리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지혜와 실천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혐오차별 극복을 위한 법제도화, 차별금지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상 희

혐오표현은 또 다른 형식의 차별이다. 우리의 경우 통치술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던 혐오전술들이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경향과 결합하면서 혐오표현은 사회적 갈등의 표출방식이자 동시에 그것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름과 차이를 열등함, 불결함, 불온함, 혹은 위험함 등으로 표지화하고 그에 대한 집단적 공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전이시키는 한편, 자신이 속한다고 관념되는 사회적 다수집단을 예정하고 그 속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행위가 그 하나의 양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개인적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면서 소정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확보하고자 포퓰리즘의 전략은 또 다른 혐오의 구성체를 이룬다. 애당초 존재하지 않은 "다수자집단"이 일정한 사회불안요소 혹은 기성의 편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혐오의 타겟이 되는 소수자집단을 먼저 구성하고 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혹은 공격과 배척의 표현/행동들을 조직하고 동원함으로써 관념상의 "다수자집단"이 구성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자집단은 물론 스스로를 "다수자집단"의 구성원으로 정체화하고 그 집단에 귀속되기를 원하는 대중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권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을 "짓밟을 수 있는 등급"(vertretbareGröße)으로 비하하는 차별 그 자체가 되며, 그들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제반의 인권들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인류보편의 가치로서의 인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혐오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함께 민주사회에서 요청되는 그 시민성까지도 침탈하는 해악의 원천이 된다. 한편에서는 소수자집단에 대한 과소대표를 야기하며 다른 편에서는 "다수자집단"의 과다대표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한 반성과 교정의 전망은 사라져버린다.
혐오차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은 여기서 나타난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공동체관리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를 비롯한 제반의 정치공동체들은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는 혐오차별이며, 그것은 어떠한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억지되거나 혹은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선언하며 이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공적 의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또 확인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밝혀낼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그를 위한 하나의 단위 내지는 발판을 이룬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해외입법례와 적용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 준 일

세계 각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관철하고 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은 대체로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차별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와 차별가해자에 대한 제재절차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여기서 평등은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그리고 상이한 대상에 대해서는 차등적 대우를 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차별은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대우하거나 차이가 있는 상이한 대상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에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이 포함된다.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는 진정직업자격요건(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모성보호조치, 적극적 조치(affirmative/positive action) 등을 들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는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국가 등 다양하고, 차별금지영역으로는 고용(직장), 교육(학교), 거래(상점) 등을 들 수 있다. 차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기구나 행정기관 또는 법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고, 차별가해자에 대해서는 권고, 조정, 시정명령, 법원의 임시조치, 손해배상판결, 형벌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차별금지사유나 차별금지영역마다 제정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나 차별금지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영국으로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가지고 있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호주로 연령, 장애, 인종, 성별과 같은 차별금지사유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ADA, DDA, RDA, SDA)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19개 차별금지사유와 3개의 차별금지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국가인권기구에 해당하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성, 업무,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한 일종의 조직법이나 절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에 관한 실체법 형식의 법률이 필요하여 2020년 6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차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괴롭힘을 포함시키면서 또 하나의 차별유형으로 혐오표현을 추가하였다. 괴롭힘과 혐오표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차별구제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기존의 4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일반적 차별금지법 역할을 담당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체계적 정합성을 만들어가면서 일관되면서도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개념인 괴롭힘이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해석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인권정책회의>

부패퇴치 및 인권강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의 "반부패와 인권 사이의 결합(The Nexus between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보고서는 부패를 인권 문제로 주장합니다. 광범위한 부패를 경험하는 국가는 인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반부패와 인권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부패 수준을 보이고, 민주적 기관들이 국민과 협력하여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부패는 감소세를 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인권, 투명성 간의 연계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부패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스웨덴 정부의 핵심 포커스입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은 "민주주의 토크"를 전세계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공동 주최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차원에서 지역의, 혹은 국제 수준의 인권 단체와 그 이해 관계자를 지원합니다.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는 이러한 활동의 주요 파트너입니다.

2030의제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있어서의 도시의 역할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소장
모르텐 샤에름

오늘날 부패와 인권 향유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있으며 부패는 인권의 실현 뿐 아니라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함께 확립된 보다 광범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라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SDG의 목표16.5에서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월에 유엔 사무총장은 그의 주도로 COVID-19 사태 이후 더 나은 재건을 위해 "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 부패, 금융 위기, 범죄 증가 그리고 열악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국가 차원에서 도시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부패와의 싸움은 재건의 핵심 요소이며 그 반대의 경우: 부패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는 더 나은 재건을 할 수 없습니다. 부패는 법의 지배를 침식하고, 사법 제도를 왜곡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 과정을 방해합니다.

부패는 건강, 교육, 사회 보장 및 기타 핵심 권리의 접근과 같은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며 부패 행위는 또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진, 홍수 또는 쓰나미로 인한 건물 붕괴와 사망자들로 자연이 얼마나 자주 비난을 받는지 예로 언급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연에 책임이 있는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인간의 불이행, 태만과 특히 부패 때문에 재앙이 됩니다. 단층선 건물들을 강화하거나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쓰나미 보호를 제공하기위한 자금이 제공되었으나, 부패하거나 부정한 관료와 정치인들의 주머니에서 자금이 사라지면 재난은 지진이나 쓰나미로 구체화되고 책임은 "자연 재해"의 베일 뒤에 숨겨져 버립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01-2010년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불법 유출로 5조 860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및 지속가능 개발목표(SDG)를 충족하기에 충분했을 금액입니다.

부패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스웨덴, 덴마크 및 기타 유럽 국가들 어떤 나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부패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없거나 제한적이며 관료가 대중에 책임을 지는 기능이 없는 시민권과 정치권이 제한된 사회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인권 이행은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부패 관행은 많은 곳에서 정상의 일부라고 인식되며 부패하였다고 낙인 찍을 만큼 충분한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부패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그 가용 자금들이 부패나 탈세로 증발되어 교육권에 접근할 수 없는 어린이들과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부패 희생자들의 가시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권은 전통적인 반부패 의제를 보완하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다른 방식으로 부패를 밝혀 줍니다.

부패는 정부와 가버넌스에 환멸을 불러일으키며, 종종 정치적 역기능과 사회적 분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권은 권리보유자로서 각 개인을 보호하고 일관성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강한 인식은 부패 관행에 대한 상향식 대응을 동원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지방 당국이 사회에서 부패를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곳입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가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적 추세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반부패 운동은 오랫동안 부패범죄의 예방과 처벌, 기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 형사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부패와 인권의 상관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2030 아젠다"가 대표적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6번(포용적인 사회와 제도 구축, 모든 사람에게 정의에의 접근 제공 등)은 빈곤과 기아종식, 건강한 삶과 양질의 교육 보장 등 여타 SDGs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불법적 재정 유출 및 부패와 뇌물수수 감소(16.4&16.5) 외에 책임 있고 투명한 기관 및 포용적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16.6&16.7)이 세부목표에 포함되어 반부패를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하려는 것이 명확해졌다. 시민에게 공중보건,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또한 최근 부패를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뇌물수수와 횡령, 직권남용, 파벌등용 등 전형적인 부패의 관점에서 벗어나 부패가 인권보호에 미치는 가장 큰 악영향 중 하나를 들자면, 인권의 중요한 사회적 보호기제인 법치(rule of law)와 적법절차(due process)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이고 부패의 파급력 또한 집단적이다.

부패가 인권보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일례로 사법부의 부패를 들 수 있다.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2017년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부패가 인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불처벌(Impunity)을 조장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법적 접근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차별이 심화되고 공정(fairness)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평등과 참여,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이라는 인권적 접근은 피해자를 반부패 운동의 주체로 끌어들일 뿐 아니라,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욱 쉽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연대가 가능하다. 또한 부패가 관여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안에서 모니터링과 집단 공익소송, UN 특별절차 등 국내외의 인권보호 매커니즘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적 경험 및 인권 영향

화성시장
서 철 모

화성시는 약 20년 만에 인구 19만에서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청렴과 반부패를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의지를 표하였으며,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아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인권 실현에도 부합한 만큼 공직자들에게도 청렴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원 건은 공문 통보에 앞서 민원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설명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행정과 시민과의 신뢰 관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노력의 결과로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경기도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청렴·반부패 인식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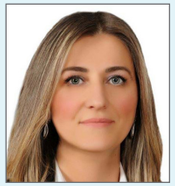
화성시가 2018년까지 줄곧 청렴도 평가 3등급에 머무르다 1등급을 달성한 것은 공직자와 시민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입니다. 청렴 도시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딛은 만큼 행정이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퇴치 및 인권강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이즈타팔라파 시장
클라라 브루가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중심의 도시행정: 이스탄불

이스탄불시의회 의원
피켄 카라한

이스탄불은 1600만명이 살고 있는 터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세계적으로 큰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터키와 세계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인권중심의 접근방식으로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 23일 선거 직후 수립된 이스탄불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교육과 보건에서 동등한 기회를 우선시하고, 양성평등에 기반을 두며, 아동권을 준수하는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고방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관리

에크렘 이마모글루 (Ekrem mamo lu) 시장은 2019년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1만3천 729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정부의 압력으로 선거를 다시 치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는 성명을 내 놓았고, 6월 23일 선거에서는 득표차가80만표로 늘어났습니다.
이스탄불은 권리 침해를 명확하게 입증한 이스탄불 시민들의 선택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포용적 경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관리에 있어 투명성, 책임성, 건전한 통제 메커니즘은 인권에 기반한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IMM은 이스탄불 행정에서 투명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통해 입찰과 시의회 회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크렘 이마모글루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원주의자 이스탄불

2019년 6월 23일 선거 당시 54%의 득표율로 취임한 새 지방정부는 시민들 모두에게 동등한 서비스와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정권과 달리 이스탄불 모든 지역의 시장을 만나 다원적 접근방식으로 우리 시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2019년~2024년 전략계획을 위해 사회 모든 영역을 다루는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총 20만 명의 사람들이 대면 인터뷰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이스탄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IMM 행정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다

이스탄불 시민들이 차별 받지 않는 평등정책을 중점에 두고 있는 이스탄불 지방정부는 내부 고용 정책에서 이를 즉시 반영했습니다.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9.5%에서 25%까지 높였고, 여성 고용률도 30%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이스탄불의 교통망을 구성하는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여객선 직원으로 고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69년 된 도시 여객선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고용되었습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퇴치 및 인권강화를 위한 도시의 역할

스웨덴 지방당국및지역협회 선임고문관
세실리아 벨린

스웨덴 내의 지방과 자치단체는 매일 인권이 존중·보호·충족되며 증진되어야 하는 장소와 단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권화 시스템과 강력한 지방 자치체제로 인해 인권에 대한 노력은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 교육, 참정권은 자치단체와 지역 그리고 주민들 간의 회의에서 구체화된다.

스웨덴의 지방과 지역적 상황에서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웨덴지역기관및지방협회(SALAR,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는 라울발렌베리연구소(Raoul Wallenberg Institute)와 함께 정책 및 조직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지방 당국과 지역의 경영진이 인권(플랫폼 첨부) 업무를 강화하고자 할 때 플랫폼이 출발점이자 개발 도구로 운용하려는 취지이다.

UN에 따르면 권리 기반의 업무 방식은 차별 금지와 평등, 참여와 포용, 투명성 및 책임성의 원칙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플랫폼에서 강조되는 이러한 원칙들은 분석 및 계획에서 실행 및 모니터링까지 모든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런 원칙들은 또한 반부패 작업에 유용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늘날 인권과 반부패는 같은 포럼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서로 다른 분야에서 다뤄진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특히 목표16에 명시된 평화, 정의 및 강력한 기관('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을 위해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 있고 포용적인 기관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 지표인 16.5는 부패와 뇌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로 인권 관점과 반부패 관점이 함께 하며, 이는 인권과 부패 척결 강화 노력을 통합하고 결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보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인권조약기구 현지이행조직(파키스탄) 및 자발적 지역SDG검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파키스탄지부 팀장
알리 임란

파키스탄은 각종 국제협약에 서명하였다. 파키스탄에서 각종 조약기구 보고서의 제출을 전담하는 기관은 정부인 인권부이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 등 6건의 조약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지보고를 통한 지역차원의 인권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파키스탄 인권부는 최근 국내 전역의 인권추세 경향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및 기술적 데이터분석 메커니즘을 구축 및 제도화하였다. 인권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여성지위위원회법과 같은 진보적인 입법조치를 개시하였다. 지역차원에서는 인권 증진, 보호, 및 이행에 관한 사안 일체를 책임지는 인권담당부서가 지방정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2016년 파키스탄정부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Plus)의 요건에 대응하여 전국 4개주, 길기트발티스탄(Gilgit Baltistan) 및 파키스탄령 잠무&카슈미르(Azad Jammu and Kashmir)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조약이행실(TIC, Treaty Implementation Cell)를 조직하였다. TIC는 각 지역 인권담당부서에 의하여 개최된다. TIC는 파키스탄이 체약한 27개 UN협약의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TIC는 전략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TIC는 정책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파악하는 활동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인권보호에 있어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파키스탄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을 약속하였다. 2018년 3월, 파키스탄 정부는 국내최고의 경제정책수립 포럼인 국가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적인 국가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는 SDGs지표 달성을 위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SDGs 모니터링 및 평가프레임워크에 반영될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각 주와 연방령 정부가 현지의 필요에 기반하여 개발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침이 되고 있다. SDGs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기술위원회와 주제별 분과를 제도화 하였다. 각급정부에서부터 기초행정단위까지 책임자를 지명함으로써 2030의제와 개발우선순위를 조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2030의제에 기반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정책, 분야별 계획 그리고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정자가 되었다.

도시는 인권구현의 핵심에 있어야 하며, 인권조약 및 인권법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 파키스탄은 시 정부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에서 2019년도 자발적 국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불행하게도 파키스탄에는 선출된 지방정부시스템을 갖춘 곳이 전무하며, 시 정부는 행정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 정식으로 인권침해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의 도시들은 국제조약, 파키스탄의 헌법 그리고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명시된 SDGs와 기본권의 구현을 위한 진척도를 측정하고 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발적 현지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

핵발전소와 인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른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을 인권 측면에서 다룰 기회가 적었습니다. 핵발전소와 인권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책임과 대응 실태를 주요하게 다루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입니다.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서포트피어 센터'의 '아오타 요시유키(青田由幸)' 대표가 '(후쿠시마 사고) 피해지역의 장애인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의 사례'를 발표합니다. 사고 당시 모든 주민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장애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충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당시 그리고 현재 상황을 주민 인권관점으로 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대응이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을 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와 인권'을 주제로 한국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기후에너지국장이 발표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핵발전소 정책 추이, 핵발전소와 주민피해, 핵폐기물로 반복되는 갈등과 주민피해 실태 문제를 알립니다. 이에 이어 우리의 과제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의제를 제시합니다. 경주 주민인 황분희 선생이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쟁해온 사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소개하고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부산에너지시민행동 이언주 활동가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문제에 대해서,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이 전북 지역의 활동 사례, 탈핵신문 김현우 운영위원장이 종합 토론에 함께 합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배정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끕니다.

핵발전소로 촉발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의제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주민들의 관점에 깊이 들여다 보고, 향후를 함께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피해지역의 장애인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의 사례

서포트피어센터 대표
아오타 유시유키

1. 사고 발생당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에서는 진도6(약)의 강한 지진동을 감지했고 10m 넘는 쓰나미가 닥쳤다. 미나미소마시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는 636명, 피난 생활 중 질병악화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516명에 이르렀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자 수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다. 지진 · 쓰나미와 동시에 발생한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되었다. 피난자 수는 미사미소마시 총 인구 71,000명 중 약 60,000명에 달했고, 피난하지 않고 시내에 머문 인구수는 불과 약 10,000명이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20~30km 지점에는 경찰과 자위대 건문소가 설치되어 출입을 막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 물품과 인적 지원이 모두 끊겼다.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고 병원과 복지시설도 폐쇄했다. 식량과 약품이 떨어지고 지원 스텝들도 다수 떠났다. 결과적으로 미나미소마시에 남은 사람은 원래 우선적으로 피난해야 하는 고령자, 장애인, 장애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다.

2. 지원활동

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당시 10명의 이용자가 피난하지 못하고 시설에 남게 되었다. 미나미소마 시내에 몇 명의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지, 누가 머물고 있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시에 장애인 수첩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받은 정보를 이용해 나는 65세 이하 지적·지체 장애인 모두의 안부 확인과 피난을 위한 조사와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장애포럼(JDF)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전문가 스텝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미나미소마시 내 총 1,139명의 장애 수첩 소지자 중 492명은 피난을 가지 못하고 시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 공개를 통해 장애인들의 상황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미나미소마시가 유일했다.

3. 조사결과

피난하지 않고 미나미소마시에 남아 있던 장애 수첩 소지자는 총 492명(지체장애인 343명(69.7%), 지적장애인149명(29.9%))이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피난을 결정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었다. 자택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492명 중 346명은 한 번 정도는 피난했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었다. 또한, 피난 경험자 346명 중 50%를 넘는 171명은 후쿠시마 현 밖으로 피난했다. 또한, 피난 경험자 346명 중 159명은 피난소로 갔지만 3주 안에 다시 돌아왔다. 장애인이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4. 현재 상황

올해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슬로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일본이 부흥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일본이 부흥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후쿠시마 현 내에서는 방사선량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난 지시 구역을 잇따라 해제하고 철도 등 인프라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방대한 양의 오염토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위치하는 오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에 만들어진 중간저장시설로 반입되고 있다. 정부는 오염토를 30년간 그곳에서 보관 후 후쿠시마 현 밖에 최종처분장을 확보해 옮기겠다며, '후쿠시마현을 오염물질의 최종 처분장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처분장 후보지가 되겠다고 손을 든 지자체는 지금까지 어느 한 곳도 없다.

※ 이하 중략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와 인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안 재 훈

요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은 핵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환 등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도 주민 피해와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에 반발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등이 실시되었다. 최근 핵발전소 주민 갈등사례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사고이후 변화
- 핵발전소에 대한 부정여론 확대
- 한국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 6기 신규건설 계획 백지화, 재생에너지 3020계획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치적 갈등 심화

핵발전소와 주민 피해
- 상존하는 사고위험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 핵폐기물: 중저준위, 고준위
- 경제적 피해와 종속
- 갈등 과정에서의 국가 폭력과 지역공동체 파괴

핵발전소 지역 갈등 사례
-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 미확보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포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정책결정, 임시저장시설 추진을 둘러싼 갈등 심화
- 월성핵발전소 주민 이주요구: 삼중수소 피폭 및 갑상선암 발생. 2014년 8월부터 6년째 이주요구 농성 중
-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 대전 원자력 연구시설 사건사고 피해와 주민갈등
- 초고압송전선로 갈등: 밀양, 청도 송전탑 사태 등

과제
- 핵발전소 주민 피해 조사 및 대책마련
- 주요 의사결정 시 주민의견수렴 제도화
- 피해, 갈등 등 외부비용 제도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국가폭력 피해 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주요한 국가폭력 사건(제주 4 3사건, 여순반란사건, 부마민주항쟁, 광주 5 18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공동체를 위한 역사로 계승되어 왔다. 개인의 역사적인 경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경험한 노인과 가족들의 오늘날의 삶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억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이 그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거나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 국가폭력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삼아 인권공동체로 계승 발전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폭력 피해 노인과 가족의 삶의 궤적을 함께 기억하고 인권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평생의 기억 – 국가폭력의 흔적이 남은 삶

광주5·18민주화운동 목격자
데이빗 돌린저

그 누구라도 유년시절에는 자신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충만한 삶,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가 행사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폭력은 인생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아직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한 젊은이에게 평생토록 지속되는 후유증을 유발한다. 나는 5·18의 도화선 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국가로부터 받은 위협이 유발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매우 생생하게 말할 수 있다. 그 때 나는 고작 24살이었고, 이후 며칠간 만났던 여느 20대 젊은이들과 비교해서도 아주 순진한 청년이었다. 당시, 나는 광주 남서쪽 버스로 한 시간 가량 걸리는 곳에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에 살고 있었다. 나는 1980년 5월 18일에 벌어진 참상을 목격하였고, 결국 5월 21일 수요일에 광주로 되돌아갔다.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계엄군이 다시 시내로 진입할 때까지 나는 시민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외신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했으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전남도청에서 머물렀다. 이따금,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내가 하던 일이었다. 광주는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영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었지만, 동시에 광주는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가슴 한 구석을 텅 빈 상태로 만들어 버린 곳이기도 하다. 그 날 이후, 나는 단 하루도 그 고통과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주 때문에 나는 "아니오" 혹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자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광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삶을 다양한 방향에서 남들이 알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매일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한 것일까? 진상이 규명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나는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겪었던 고통과 기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민주열사들이 너무나도 짧았던 생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5·18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5·18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4·3과 노인
국가폭력에 희생된 유가족으로의 삶

제주 4·3기념사업위원회 조직위원장
양 성 주

70여 년 전 제주섬을 휩쓸었던 국가폭력은 그 규모와 잔혹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7만 명 정도였던 제주사람들 중 3만 명 이상이 죽어 갔다는 것은 섬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제주4·3특별법에서 정한 기간은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에서 1954년 9월 21일 금족령이 해제될 때까지로 무려 7년 7개월이다. 반세기 동안 왜곡과 침묵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이루어진 희생자 신고를 통해 14,532명(2020년 3월 27일 기준)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다. 사라져 버린 마을이 100곳이 넘고, 불에 타버린 집이 4만 호가 넘는다고 밝혀져 있다.

이런 대규모 희생이 발생했음에도 국가는 진상규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했고 유가족은 연좌제의 사슬에 얽매어 있어야 했다. 당시에 태어난 자손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접어든 지금에라도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남편을 잃고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하소연 할 시간도 없이 자녀들은 키워내면서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버린 분들은 4·3에 대해 얘기할 때 아직도 가슴이 터져 제대로 말을 이을 수조차 없다. 아버지를 잃고 고아처럼 자란 유족들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고 성장한 후에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 글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의 배우자, 본인이 형무소 생활을 했던 생존수형인, 상흔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신 4·3후유장애인,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었다가 나중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 총살된 사실을 확인 하신 유족, 불법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학살된 유족, 예비검속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을 돌이켜 보고자 한다. 또한 몇 단체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상대로 조사한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 이후 노인이 된 제주4·3 관련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며 지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에 제정된 제주4·3특별법과 2003년에 발표된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를 통해 4·3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과연 이해 당사자인 희생자와 유족들 개개인의 삶에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순항쟁 유족의 삶과 기억

역사공간 벗 연구원
주 철 희

1948년 10월 19일 여순항쟁부터 1950년 6·25전쟁 시기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이란 '말살' 혹은 '절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확고한 반공국가이며 이분법적 사회질서를 완성하였으며, 빨갱이문화(반공문화)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피학살자의 유족은 새로운 질서와 문화 속에서 최하위 계층 삶을 살면서도, 항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청·장년기의 시대 상황은 자의든 타의든 학살을 망각하거나 새로운 질서와 문화에 편입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였다.
현재 1세대 유족이 대부분 돌아가신 상황이며, 1945년 해방 전후로 태어난 분들도 어느덧 70대 후반이다. 청·장년기의 고통과 차별은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들의 기억 속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각인된 경험 또는 기억은 죽고 난 후에나 끝나는 전쟁일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발간된 증언록(나 죄없응께 괜찮을거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 골령골의 기억전쟁)에서 여순항쟁 관련 증언자 총 34명을 분석하였다. 가족의 학살로 인한 트라우마와 청·장년기의 냉대와 차별이 노인된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첫 번째 반응은, 망각이었다. 반공을 국시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부분 유족은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을 잃은 억울함을 가슴에 묻었다. 학살 이후 계속된 유·무형의 국가폭력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 및 차별은 학살을 망각하도록 강요했다.
두 번째 반응은 빨갱이 콤플렉스다. 가족을 잃은 유족 중 많은 사람이 '빨갱이 콤플렉스'에 살고 있다. 피학살자들이 국가에 의해 학살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빨갱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철저한 반공체제와 이분법적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낙인은 스스로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세 번째 반응은 자발적 복종과 충성이다. 반공이 국시로 자리하고, 국가가 정치·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구조에서 청·장년기를 보내야만 했던 유족에게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다.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발적인 복종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자발적 복종은 '빨갱이' 담론과 연좌제 국가(사회)에서 유족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국가체제에 복종하고,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고통과 집단기억
부마항쟁 피해자를 중심으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김 종 세

1979년 부마항쟁이 발발한 지도 40년을 넘었다. 그 때의 주역이었던 청년들은 어느 덧 대부분 예순 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1명이고 연행된 인원이 최소 1,563명을 넘는다.
이들 중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계엄군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항쟁을 여론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각종 조작공작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자해, 자살 미수 등이 일어나고 신체 손상이나 성고문에 의한 정신 충격 및 '넋이 나간'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상당수는 석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감시와 사찰, 사회적 편견과 낙인, 구직활동 방해나 경제활동의 불이익 등으로 정서적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항쟁 당시 조사 과정에서 당한 고문,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가 더해져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여럿 있다.

오랫동안 이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개인 차원에서 국가폭력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으나, 부마항쟁보상법 제정과 부마진상규명위의 구성으로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기억을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기억으로 사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물론 그것이 쉽게 승화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마항쟁 국가폭력의 피해자 고통이 개인 차원으로 감내하는 것에 그친다면 부마항쟁은 피해 당사자에게는 '잊혀진 사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집단기억으로 사회화 하고 나아가 항쟁사의 지평을 넓혀 유신 선포 이후부터 유신체제 철폐 때까지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동시에 소환한다면, 고통의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사회 속에서 해원(解寃)하고 상생할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인권공동체라는 논의가 온전한 내용을 채우게 되지 않을까?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SDGs와 인권 통합 이행점검체계 구축 방안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2018년 국가SDGs가 수립되고, 2019년 기준 14개 지자체가 지방SDGs를 수립하는 등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관점의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인식제고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SDGs 이행체계를 통해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접근체계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정부 대상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SDGs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광주광역시 사례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 인권정책 거버넌스 및 SDGs 이행체계 연계방안과 SDGs 이행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인권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는 길

덴마크인권연구소 소장
벌겟 피어링

2030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천명하고 있다.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분석에 따르면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세부목표의 90% 이상이 각종 국제인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은 인권의 존중, 보호 및 보장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를 비준국에게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은 있을 수 없다. 한편, 2030의제는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방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2030년이란 구체적 시한을 명시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볼 때, 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의 융합은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정책 일관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국정부는 SDGs 및 인권의 이행과 보고를 위한 결합된 접근법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 인권감시 메커니즘에 기반한 지침은 국가차원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덴마크인권연구소는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 및 SDGs의 이행과 감시를 촉진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지침(The Human Rights Guide to the SDGs)은 169개 SDG세부목표, 각종 국제인권협약, 노동기준 및 다자간환경협정 사이의 구체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또 다른 다국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지속가능발전-인권 데이터 탐색기(SDG-Human Rights Data Explorer)는 SDG세부목표와 관련하여 UN인권보호체계 하에서 만들어진 15만건의 권고사항을 국가 및 권리자 집단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본 발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권기반 접근법의 핵심요소를 논하고 앞서 언급한 도구가 이러한 접근법의 활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위트레흐트시 국제전략자문관
한스 사커스

지난 2015년 UN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야심 차게 선포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같이 SDGs는 글로벌 차원의 정의(justice)라는 관점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각종 국제기구가 SDGs를 보편적인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연구활동도 SDGs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성(locality)"과 "지역화 프로세스(도시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의 추진방안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SDGs를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Taylor, 2002)으로 바라봄으로써 SDG-도시-이니셔티브를 탐색할 때, "지역서사(local narratives)"로서 SDGs의 작동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과 글로벌간 호혜적 관계를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현재 주류적 시각인 "이행(implementation)"관점을 "변형(translation)"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SDG서사에 내재된 숨은 그림을 찾는 것 또한 지역성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SDGs와 인권이 변환의 가능성에 있어서 서사프레임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윤곽을 그려볼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행사례와 향후 추진과제
한국정부 수용 권고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정책위원
박차옥경

한국정부는 국제 인권모니터링 매커니즘을 통해 한국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으며, 그중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한 현재적 평가 및 권고안과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연계 정도를 확인하여 국제적인 인권흐름과 광주광역시의 조응정도를 살펴본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주요 인권협약을 기준으로 인권지표 및 광주광역시 SDGs와 UN SDGs의 연계현황을 분석, 각 특성을 살펴본 후 광주광역시 인권지표와 광주광역시 SDGs 지표 통합(안)을 제시한다.
이미 각기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인권거버넌스 체계와 광주광역시 SDGs 이행체계를 비교, 각각의 특성을 확인한 후 인권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이행점검체계(안)을 제시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 서비스와 인권과제

지난 수십 년간 인권 원칙에 전념해온 지역 및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식시켰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더 책임감 있는 제도를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긴급한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위기와 중장기적 영향에 맞서며 지방정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1차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관할 구역에서의 요구와 현실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불평등에 대한 전염병의 영향을 줄이고 건강, 주거, 직업, 비차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현 위기의 핵심이다. 현 상황은 지역 및 지방정부가 모두를 위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 위기를 넘어 지방정부는 세계적 전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우선순위와 미래를 그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의 지방정부는 위기 대응을 이끌며 시민사회 및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와의 새로운 협력 형태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인권 기반의 공공서비스가 관할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대응책으로 떠올랐다.

자가격리 기간 중 성범죄 사례가 더욱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사회에서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비상사태가 초래한 긴장감은 때때로 대립과 분열을 일으키는 혐오발언들을 증폭시켰다.

-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세계적 전염병 유행 위기가 기존의 취약성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그리고 또한 인권을 이행하는 지방정부에 있어 어떻게 개선된 역량을 제공하는가?
- 위기 중에 축적된 경험이 어떻게 더욱 구조적인 공공 서비스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 지난 몇 년간 인권도시들이 시행한 어떤 정책이나 행동, 이니셔티브가 현 위기를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COVID-19 이후 세계를 건설하는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 및 인권 과제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무총장보
가브리엘라 라모스

UNESCO와 통합도시 및 지방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0차 세계인권도시포럼 제3차 본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라모스이며 UNESCO 사회인문과학 부국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준 광주시에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에서는 'COVID-19 이후 세상을 건설하는 지방 정부: 공공 서비스와 인권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시들은 급속한 도시화, 인간의 이동성, 기후 변화,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것들도 모자라 이제는 COVID-19 대유행 등 현대 사회를 괴롭히는 다양한 도전의 최전선에 있으므로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 선봉에 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위기 동안 도시의 중요한 역할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는데 이 위기에서 지역 대응은 가장 취약한 집단, 즉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위기 동안 도시들은 생명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선봉에 있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증가되고 있었으며 현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조치가 강화되어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방 정부는 교육, 보건, 경제 안보 분야를 포함한 포용적 사회 정책 개발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발전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불평등이 심한 세상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 그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방 정부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포함한 인권의 '지역화' 노력은 모든 인권도시 의무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저는 Amartya Sen의 "개발은 우리가 이끄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향상시키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고자 하며 그것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NESCO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와 해비타트III (Habitat) 의 새로운 도시 어젠다(New Urban Agenda)를 통해 도시가 그 목표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계적인 담화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진보를 이루었으며 전 세계 500여 도시의 글로벌 플랫폼인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국제연합'을 통해 오늘날 세계에서 도시화의 인간 모습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현재의 사회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공통된 목소리로 행동합니다. 이는 또한 도시포용의 필수요소로서 성평등과 청소년 권리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과 지역정부 간의 글로벌 연대와 협력에 있어 선구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성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COVID 19 위기의 주요 피해자로서 잃어버린 세대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COVID 19이 우리의 삶과 도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여러 도시에서 고용 및 금융 서비스 접속에 대한 UNESCO의 데이터는 방대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의 70%는 고용서비스 접속이 어려운 반면 54%는 금융서비스 접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 장벽 외에도 COVID19 기간 동안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차별요인은 사회적 지위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한 인구의 24% 였으며 정치적 정체성이 21%로 근소하게 뒤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차별에 대한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며 도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처럼 위기 때 복합되는 경향이 있는 인종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오는 이 해악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료진, 간병인 또는 소위 "필수적인 일꾼"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깨에 가해진 매우 불공정한 부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의 희생자로서 실제로 이 의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며 대유행 전염병이 발생하기 12 개월 동안 성에 기초한 폭력이 2억 4천 3백만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유행은 실제로 여성들의 개인적 진실성에 대한 위협에 노출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고립, 재정적 및 식량의 불안정, 실업, 학대자로부터 탈출 불가능 등의 악화 요인으로 인해 이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UN Women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봉쇄 조치가 있은 지 며칠 만에 가정 폭력과 친밀한 파트너 폭력이 30 %에서 50 %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보안 서비스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이 1.8 배 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원 취약상태보다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더 취약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악순환으로 충격의 시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위기 때 성에 기초한 대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 여성들을 과대 대표하고 있습니다. 5억2700만명의 여성들이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부동산, 제조업, 소매업 등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 42%가 이 부문들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빈곤층으로 살 수 있는 UN의 추계 2억 1400만명에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있으며 소녀들은 또한 학교 폐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많은 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는 대유행에 대한 대응의 최전선에 있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악영향의 규모를 인식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 집단적 성찰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지역 인권 대책은 기존의 사회 문제 악화에 있어서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은 모범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노력 동원의 차원을 넘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위기의 악영향을 세심한 눈과 열린 마음, 혁신적인 렌즈로 분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다시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두면 이 대유행에서 벗어나 더 나은 "다음 새로운 정상 (next new normal) "을 구축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에 그 전례가 없는 시기로 최대한 연대, 협력, 혁신으로 대처해야 하며 위기 동안 우리의 도전과 노력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회복력을 발휘하며 시민들의 권한부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COVID-19의 후유증에서도 효과적으로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의 집단적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재건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 인권을 기반한 접근을 통해 어디에 노력을 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하며 사회적 포용 차원 또한 포함시켜야 합니다.

UNESCO는 이 안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포럼의 다른 참가자들 포함하여 광주시를 시작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협력하여 일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봉사는 포용적인 도시 거버넌스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3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호한 목적의식과 생산적이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습니다

혹스베이 시장
알렉스 워커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스 워크 시장이 시의회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센트럴 혹스베이는 뉴질랜드의 작은 시골 공동체의 전형으로, 중앙 정부 시스템과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고, 다른 더 큰 지역과는 달리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트럴 혹스베이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키고 합니다. 팬데믹 이전, 혹스베이 의회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기관이 함께 모여 지역 사회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COVID-19동안 지역 사회의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하며, 연령, 인종, 성별 또는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식량과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취약한 마오리족과 청소년들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센트럴 혹스베이 시의회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회복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목표계획, 개선된 조달 정책, 지역 강점 및 네트워크의 활용은 보다 강력한 공동체를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혹스베이에서 시행된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양한 지역 사회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량과 지방정부의 미래 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위한 도전

고양시장
이 재 준

역사상 세 번째로 선포된 팬데믹 사태는 그동안 은폐되거나 간과되어 온 인권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는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 가장 곪아있던 상처에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양적 성장에 집중해 왔던 우리 사회는, 이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백신을 통한 물리적 치유만으로 종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회의 불합리한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더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지방정부와 민관 거버넌스의 참여였습니다.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수평적으로 퍼져나갔고, 시민과 민간 거버넌스의 자발적인 동참은 새로운 협력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시의 사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인권도시를 향한 방향과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

그리니 시장
필리프 리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 종 효

코로나19로 인권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이 역설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경제·문화적 권리 등을 제약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후속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광주시는 민주, 인권, 평화의 의미를 담은 5·18 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응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적 대응 △나눔과 연대의 대응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처하고 인권보호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공공의료원'을 2024년에 개원하여 음압병상 40개와 일반병상 210개를 확보하고, 광주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진료받을 수 있는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3년에 개원할 것입니다.
둘째,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기후위기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올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전력부문을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공원조성, 생활폐기물 100% 자원화 등을 통해 기후안심도시를 실현할 것입니다.
셋째,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시작된 이후, 인권연대를 향한 노력이 활발해졌지만, 상대적으로 인권연대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과제도 많아졌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강고한 실천적인 인권연대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NGO 등과 함께 인권연대를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 및 COVID-19
빌간지시의 경험

빌간지 시장
비제이 사라와기

COVID-19는 인류에게 특별한 도전을 가져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쳤으며 공공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쳐 지구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네팔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3월, COVID-19의 사례가 증가하자 예방조치로 전국적인 봉쇄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제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이 과제를 처리할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팔이 일원화된 국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정부 등 3개 정부 계층의 연방정부 구조로의 전환한 것은 아주 최근으로 이 대유행이 우리가 이제 막 연방주의를 시작한 시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도전을 제기하였으며 연방주의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전면에 가져 왔습니다. 연방 구조 간의 효과적인 조정 부족, 적절한 법률 부족, 자원 부족, 적절한 기관들은 문제의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위협적인 공황의 분위기를 조성한 COVID-19에 대하여 과학적 정보와 이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가용 자원들은 두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에서의 증가 사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특이한 도전들에 직면해 왔으며 했고 이 여정에서 꽤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배워왔습니다.
빌간지시는 지역정부가 해야 할 일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즉시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였으며 비조직적 부문의 빈곤자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외에도 방역 센터, COVID-19 특별 병원, 대량 PCR 검사, 격리 센터 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추적 (Trace), 테스트 (Test) 및 치료 (Treat)의 3T 원칙을 따랐고 네팔에서 처음으로 각 가구에서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을 테스트하는 야심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유행 기간 동안 우리가 직면했던 주요 문제는 연방 구조 간의 조정 부족, 자원 부족, 질병에 대한 제한된 노하우, 사람들의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이고 무감각해지는 기관들, 의도적이고 원치 않는 인권 제한, 즉흥적인 의사 결정 등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웠고 우리의 단점을 개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반성해보고 변경하여 우리의 역할 기능에 있어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합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탄력적인 사회를 향해 일하는 강력하며 권한이 있고 민감한 지역 정부입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발라크리스난 라자고팔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발표를 통해 COVID-19 팬데믹 기간과 그 후유증으로부터 적절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주택은 재택 명령으로 입증된 대로 COVID-19와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대응 전선이다. 그러나 세계의 19억 인구가 적절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과밀 상황에 직면해있다. COVID-19 이전에도 전세계적으로 주거 문제가 불거진 적이 많이 있었다. 이제 펜데믹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글로벌 차원의 주택 비상 사태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많은 주, 지방 정부 및 도시가 퇴거 유예(모라토리엄), 담보 대출 상환자에 대한 세입자 보호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지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우려된다.

첫째로 인종, 성별 및 기타 계열에 따라 기존의 계층과 불평등이 반영되어 주거권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이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사망률과 취약률이 소수자와 기타 취약 집단 사이에서 상당히 높다. 수백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부적절한 주거 환경이 대체로 예방 가능한 사망과 고통에 과도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펜데믹 상황이 무서운 기세로 계속되는 동안 많은 임시적 완화 조치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퇴거, 굶주림, 노숙자 및 궁극적으로 사망률이 전례없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펜데믹 기간 동안 강제 퇴거가 가속화되지 않더라도 계속되었다. 현재 노숙자, 임시 거주민, 이주 노동자와 기타 많은 취약 집단에게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에 바이러스와 사망률이 확산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보고관은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고, 피해야 하며, 보다 나은 접근 방식을 통해 주거권에 대한 COVID-19의 최악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판데믹 이후 더 나은 구조를 구축할 때, 지방 정부는 자국에서 서명하거나 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으로 완전히 구속되는 국가 기관과도 같다. 지방 정부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

위기는 많은 대중의 희생을 댓가로 하는 투자 또는 부를 위한 방안일 뿐 아니라 주택이 기본적인 인권이자 사회적 공익이라는 공공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로 보아야 한다.

보고관은 COVID-19 동안 및 그 이후에 적절한 주거권이 보호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대한 일련의 단기, 중기 및 장기 권고 사항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시 대외실장
주 태 죽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느껴지는 글로벌 보건 위기일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1백만 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 시민의 생명권, 자유 및 안전이 침해 당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대다수 산업의 경제 또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COVID-19에 대한 관리 접근 방식을 완화할지 또는 엄격하게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고유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합니다. 정부와 의료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동의 자유, 노동권 및 생존 여부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페이(Taipei)시는 사스(SARS)에 대한 파괴적인 경험으로부터 얻은 학습을 통해 질병 예방과 인권 유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5대 유행성 전염병 예방 전략인 엄격한 내부 통제, 전진 배치, 경제 활성화, 과다 이동 방지, 경험 공유는 타이페이 성공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타이페이시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전략이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는 개인의 권리와 지역 사회의 복지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할 때 인권을 포용하여 인간성을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리가 시장
매들레인 알펠로

우리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기본권리와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권에는 생명권,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과 교육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새로운 규범에 부합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 제정될 때 제한 되었습니다.필리핀 정부의 신종 감염병 태스크 포스가 제시한 지침으로 인해 축소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표현의 자유, 가장 높은 수준의 보건기준에 대한 권리, 교육권, 여행 지역에 고립된 개인 및 해외 필리핀 근로자, 의무 연봉/PCR 검사, 의료 종사자 및 최전선 보호자 보호, 문화적 전통, 정보 보호
이러한 모든 권리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제한을 적용할 때 따라야하는 매개 변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법을 피해가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의 대표들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만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한은 자의적으로 남용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지방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LGBT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감금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개 우리에 감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희생자들에게 정의가 구현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로와 결과로 기나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더 많은 국민의 권리침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시장
호안 리보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 의 일 정 <10/09>

09:00~12:50	**T4 장애**	107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수어, 문자	
주제	기억하자 저항의 주체들! 나아가자 차별 없는 미래로!	
주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회	좌장 **박숙경** [한국]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발제	**제임스 콘로이** [미국] 펜허스트 기념보존연합 대표	온라인 중계
발표	**김용목** [한국]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여준민 [한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발제	**박김영희** [한국] 장애해방 열사 '단' 대표	
발표	**유해정** [한국]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발제	**박경석** [한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3:00~15:30	**T5 여성**	111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북경행동강령+25주년, 이행성과와 과제	
주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인사말	**한윤희** [한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개회	좌장 **백희정** [한국] 한국성인지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제	**우미선** [한국]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 포럼 대표	온라인 중계
	조영숙 [한국]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	
	노채영 [한국]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센터 센터장	
토론	**오경진** [한국]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김경례 [한국]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13:00~16:00	**N5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115쪽
공식언어	한국어, 문자	
주제	배제되고 삭제된 사람들의 이야기	
주관	인권운동더하기, 광주인권지기활짝,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개회	좌장 **박진** [한국]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온라인 중계
발제	**하금철**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정현애 [한국]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	

15:00~16:30	**N6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UNESCO-APCAD) 워크숍**	118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내용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UNESCO-APCAD) 소개 및 회원도시 간담회	
주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국제교류센터	
APCAD 소개	**수 바이즈** [호주]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고문	
ICCAR 소개	**베네디토 자키롤리** [이탈리아] 인종차별반대 유럽연합(ECCAR) 대표	온라인 중계
발제	**헨드리 세프타 와리코타** [인도네시아] 파당 시장 권한대행	
	수 바이즈 [호주]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고문	
	신경구 [한국] 광주광역시 인권교육협력 정책자문관	
토론	APCAD 회원도시 관계자	

회 의 일 정 <10/09>

15:00~17:00	**S7-1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119쪽
공식언어	영어	
주제	인권도시	
주관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개회	좌장 **실비아 야지드** [인도네시아] 파라하얀카톨릭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기조발제	**물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비서실장	
발제	**아흐마드 타우판 다마닉**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온라인 중계
	데완티 룸포코 [인도네시아] 바투 시장	
	룩만 파들룬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 법무과장	
토론	**에피 자인** [인도네시아] 아체 주 진실과 화해 위원장	
	자이날 아비딘 [인도네시아] 연구원	
	위착소노 사로사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지식허브 대표	

17:00~18:30	**S7-2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123쪽
공식언어	영어	
주제	인권도시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주관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개회	좌장 **단니 울란다리** [인도네시아] 국가대테러국장	
기조발제	**유디안 와흐유디** [인도네시아] 판차실라이념 교육기관 대표	온라인 중계
발제	**헨드라르 프리하디** [인도네시아] 세마랑 시장	
	데위리니 앙그라에니 [인도네시아] SCN 동남아시아 컨설턴트	
	율리얀토 [인도네시아] 살라티가 시장	
토론	**하이루스 살림** [인도네시아] LKiS 재단 연구원	
	안디 옌트리야니 [인도네시아] 국가여성폭력위원회 위원	

16:00~19:00	**T6 어린이·청소년**	127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공동체,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주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개회	좌장 **허완중** [한국]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발제	**서현수** [한국]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조교수	
	이은선 [한국]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온라인 중계
	옌스 휘트만 [독일] 함부르크 주정치교육원 부대표	
토론	**강구섭** [한국] 전남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모꽃노을 [한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의장	
	김병일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지부장	
	임미란 [한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회 의 일 정 <10/09>

17:00~18:30	**H1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	131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지역별 국제인권교육센터 및 교육네트워크 운영전략 모색 - 광주 국제인권교육센터 운영계획 설명, 교육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방법	
주관	유네스코, 광주국제교류센터	
인사말씀	**윤목현** [한국]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국장	
발제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인권교육센터 공동센터장 **엘레나 이폴리티티** 유엔 최고인권대표사무소 방법론 및 교육 부분 관계자 **안나 마리아 마즐로프** [스웨덴]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사무국장 **마린 우드**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스톡홀름지부 소장 **헬가 리들** [독일] 뉘른베르크 시 인권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알레한드라 나프탈** [아르헨티나] ESMA 기억박물관 관장	온라인 중계
19:00~21:00	**N7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 회의**	138쪽
공식언어	영어	
내용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의 7개 지부 대표인 운영위원간 회의	
주관	유네스코, 광주광역시,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좌장 **수 바이즈** [호주] 유네스코 아시아지역 고문	
기조발제	**가브리엘라 라모스** [프랑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사무총장보	
세션소개	**안나 마리아 마즐로프** [스웨덴]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사무국장	
축사	**베네디토 자키롤리** [이탈리아]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 의장, 인종차별반대 유럽연합(ECCAR) 대표	온라인 중계
발제	**에리아스 루카고** [아프리카지부] 우간다 캄팔라 시장 **파티미투아 압델 메릭** [아랍지부] 모리타니 누아크쇼크의회 의장 **히샴 바바리** [아랍지부] 모로코 에사우이라 시의회 의장 **베네디토 자키롤리** [유럽지부] 인종차별반대 유럽연합 대표 **신경구** [아태지부] 광주광역시 인권교육협력 정책자문관 **파비아나 고예네체** [남미지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시 사회개발국 부장 **넬슨 페르난데스** [남미지부] 우루과이 몬테비데이시 국제관계담당관 **로라 왁스맨** [미주지부] 미국시장협의회 공공안전인권국장 **모하마드 무사** [캐나다지부] 유네스코 캐나다 위원회 프로그램 담당자	
폐회사	**안젤라 멜로** [프랑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정책·프로그램 국장	
19:00~20:30	**N8 타운홀**	139쪽
공식언어	영어	온라인 중계
내용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간 대화 및 논의	
주관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PR2C),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21:00~22:30	**N9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140쪽
공식언어	영어	비공개
내용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논의	
주관	세계인권도시포럼 국제자문위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좌장 **신경구** [한국] 세계인권도시포럼 기획위원	
발제	**한스 사커스** [네덜란드] 세계인권도시포럼 국제자문위원	
토론	**모르텐 샤에름** [덴마크] 세계인권도시포럼 국제자문위원 **스네 오로라** [영국] 인권교육 컨설턴트	

<장애>

기억하자 저항의 주체들! 나아가자 차별 없는 미래로!
-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수 년 동안 논의되어 온 <도가니>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인화학교 부지 활용 계획이 추진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폐쇄된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 '펜허스트'는 그 공간에 새겨진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해온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 해 온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지역 사회로 자신의 삶을 위해 독립한 이들이 있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기를 거부하며 저항의 주체가 된 이들, 가정과 시설을 벗어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독립한 이들을 담은 기록이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재단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으나 장애인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탈시설'과 '노동권 보장'을 걸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활동이 논의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은 폐쇄하고 책임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장애(Disability)> 세션은 공간과 사람의 삶에 새겨진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억할 것인지 논의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시설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권도시의 '미래'를 그리고자 한다.

연구로부터 명예로운 기념까지
미국 펜허스트

펜허스트 기념보존연합 대표
제임스 콘로이

펜허스트종단연구의 의미와 내용

미국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과 관련된 공공시설 및 우생학에 있어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공공시설로부터의 탈피는 1970년에야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에 이르기까지 약 20만명이 지역사회로 이전하였다.
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결과에 대한 최초이자 가장 대규모의 과학적 연구는 바로 '펜허스트종단연구' 였다. 동 연구 및 유사한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이후에 기술할 것이다. 탈시설화를 거친 이들은 평균적으로 지역사회 이전 후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었다.

펜허스트 내, 그리고 이전 후 장애인 거주자의 삶

펜허스트의 사람들은 거의 외출도 하지 않고, 잦은 학대와 멸시를 경험하는 등 암울한 생활을 영위하였다. 성적 학대는 사실상 만연했으며, 제대로 대우 받지도 못하였다. 예를들면, 심리학자 혹은 심리치료사를 면담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로 이전 후, 이들은 매일 외출하고, 가족 및 친구와 더욱 자주 만났으며, 특히 그들이 받는 심리치료도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더욱 독립적이게 되었고 도전적인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

거주시설의 폐쇠 및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단 연구의 필요성

탈시설화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어떠한 큰 이익이 축적되는지 알게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장애를 지닌 시민들도 사회에 다시 합류하여 일상을 영위하고, 직업을 갖고, 먹고, 여행하고, 여가를 즐길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한다. 더욱이 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지역사회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펜허스트 기억 연대(Pennhurst Memorial & Preservation Alliance, 이하 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

2008년, 한 조직이 펜허스트 및 유사한 장소의 비극과 업적에 대한 기억을 보전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이는 바로 '펜허스트기억연대'이며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펜허스트의 역사를 활용해 장애인의 존엄과 완전한 시민권을 향한 투쟁에 대한 이해 증진 -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승리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지역, 국가 및 세계 공동체의 시민을 교육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절대로 과거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우리의 목표는 오래된 펜허스트 시설에 박물관을 만들어, 실제 역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도인 워싱턴 D.C.에 국립 박물관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국립박물관은 더 큰 장애인권 역사와 운동에 대해 알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전념할 것이다.

내용: 연대는 박물관을 통해 어떠한 종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가?

펜허스트의 오래된 건물 한 동이 현재 새로운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적: 연대는 왜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하는가?

우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과거 우리의 대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잊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 이하 중략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 공간에 죽음으로 살아나는 장애인

장애해방 열사 '단' 대표
박김영희

죽음으로 저항한 사람들 1984년 서울특별시 시장에게 '도로의 턱을 없애 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아마비 장애인 김순석열사. 서울의 거리에 무수한 계단과 턱 때문에 휠체어로 거리를 다닐 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그는 6살 아들과 아내를 두고 자살을 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이 정립단에서 10월 추모제를 지내고 오늘도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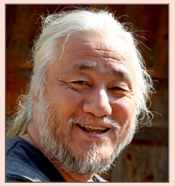
도시 속에 저항을 시작한 장애인 2002년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이용하던 노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소외되는 생애를 살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였다 하여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이동권투쟁이 시작 되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을 하여 장애인이동권이 보장 되었다.

도시에서 주민으로 명명 되는 장애인 수용시설에서만 살아야만 했던 장애인은 도시 밖의 주변인이었다. 2000년대 장애인운동이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되면서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으로 진입하면서 부모와 시설에서 담당하였던 장애인의 몸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 제도화로 바꿔나가는 투쟁을 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송국현 김주영의 죽음을 맞았다. 이와 같은 제도의 희생자의 죽음으로 장애를 등급의 나누는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의 몸을 비인권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 장애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투쟁은 긴 투쟁이 될 것이다.

죽음을 기억으로 투쟁이 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내는 것은 저항 없이 되지 않는다. 공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죽음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기억을 투쟁으로 실천함으로 결국, 도시 공간 안에서 다시 존재하는 열사이 도시를 바꿔낸 것이다. 도시 안에서 시민으로 명명 되지 않아 존재로 보여지지 않아서 제도에서 조차 배제되었던 장애인이 죽음으로 저항하고 그 저항을 기억하는 이들이 투쟁으로 도시공간을 바꿔내고 장애인은 스스로 도시의 시민으로 명명해냈다. 열사의 저항, 열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투쟁함으로 열사를 다시 존재하게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통해본 탈시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 경 석

그간 중증장애인은 민간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틀에 갇혀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증장애인의 취업은 어려운 일로 대부분 실업자 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살아가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민간 노동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그간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

'장애인권익옹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 활동'의 3대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안으로 만들고자 한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우선 보장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노동정책 실패의 원인이 장애인의 몸(손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장, 경쟁, 실적, 이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재활중심 생산성 기준'의 일자리를 공공, 협업, 참여가능, 지역사회 변화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으로 이동하는 정책의 변화이다.

예시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공공장소 퍼포먼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등 각종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등 (장애인 건강검진 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접근성 조사 등)
- **장애인문화예술활동 :** 장애인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 창작활동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 등)
-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활동 등 (발달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악기연주 등 특기 시연)

우리가 제안하는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맞춤형 3대 직무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가 '권리의 주체'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시점이다.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장애인의 고용·교육·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장애인 노동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는, 탈시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통합의 바탕이 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북경행동강령+25주년, 이행 성과와 과제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도입 25주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 SDGs 도입 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적으로는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과제들을 점검하는 한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각국 정부들이 북경행동강령 이행 성과와 한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으며, 시민사회 관점에서도 점검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담은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국가별 차원으로 이루어진 북경행동강령 이행점검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되어질 글로벌 프레임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과 연계한 국내 및 지역의 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합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인권도시로서 성평등과 여성임파워먼트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북경 25년, UN 75년: 페미니스트의 미래

아시아 태평양 여성, 법률 개발 포럼 대표
우미선

2020년은 여성인권과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된다. 금년은 북경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채택 25주년이고,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주년이며, 2030지속가능개발의제(Agenda 2030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채택 5주년이자, UN창설 75주년이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는 인권, 평등,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진척을 이루었는가? 사실 우리는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였고,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로 인하여 오히려 퇴행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상호연결 되어 있는 억압의 체계(interconnected systems of oppressions)가 어떻게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국가간, 빈부간 그리고 남녀간 부와 자원 그리고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하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책임성 결여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의무이행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흐려지고 있다. 반면, 대기업이 의사결정과 참여적 민주주의를 방해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손에 쥐고 행사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성인권과 책임성에 대한 구조적 장벽이 확인된 만큼 그러한 억압의 체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페미니스트와 여성운동은 개발정의(Development Justice)를 위한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최전선에 서 있었다. 본 발제는 여성인권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조직화가 어떻게 결부되는지 논하고, 우리의 삶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책임성과 사람들의 주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을 제안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경행동강령+25주년, 이행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센터장
조영숙

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하 '북경여성회의')는 역대로 성 평등을 논의한 국제회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강력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회의였다. 그 이유는, 회의에 참석한 187개 유엔회원국들이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이하 '북경행동강령')의 채택에 합의하면서 성 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한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책임과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각국정부가 따라야 할 성 평등정책의 규범인 북경행동강령은 성 평등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comprehensive), 변혁적인(transformative) 전략과제(strategic objectives)를 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후 유엔은 각국이 북경행동강령에서 제시된 12개의 주요관심분야(12 critical areas of concerns)에 대한 전략과제(strategic objectives)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2개의 주요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

A. 여성과 빈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C. 여성과 보건
D. 여성에 대한 폭력
E. 여성과 무력분쟁
F. 여성과 경제
G.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H.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I. 여성과 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 여성과 환경
L. 여아

2020년 올해는 북경행동강령 채택 25년이 되는 해이자 유엔이 지난해부터 사반세기 동안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발전방향을 새롭게 조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성평등 대약진을 모색하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발표는 1995년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북경행동강령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약속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어떤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미래세대를 향한 성평등 과제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역 성주류화 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광주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센터 센터장
노채영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는 해이다. 북경행동강령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 증진과 차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전체 하에 빈곤, 건강, 폭력, 무력분쟁, 경제, 의사결정, 인권, 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했다. 여기에서는 국제사회가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피해 예방과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 정책, 예산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천 전략으로 제시했다.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출범 등 성주류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폭력 예방,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도 이에 따르는 다차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운영, 성인지력 향상교육, 성인지 통계의 생산, 여성친화도시 사업 전개를 위한 법령 제정 등 성주류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과제별 정책개선 실행방안 모색, 결과 활용 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개발, 성인지 교육 및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 환류 및 실행력을 강화하여, 성평등 사업의 발굴과 책무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광주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의 전개 과정, 추진성과 및 과제를 제시하여 성주류화 정책 운영의 성공적 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배제되고 삭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기억과 공동체 - 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인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인권의 현장인 도시, 그리고 그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삭제된 사람들을 다시 기억해내고자 합니다.

도시의 과거와 현재에서 삭제된 사람들을 복원함으로서 인권도시의 미래가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공동체로 완성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그 역사 속에서 조차 배제되고 삭제된 이야기 펼쳐 놓는 것은 감춰지고 위장된 차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폭로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폭로하지 않는다면 차별은 도시의 어두움으로 지속될 것이고, 인권도시에서 온전히 인간 존엄을 보장하려는 모든 노력의 한계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주창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그러한 인권의 근원적 본질을 잊지 않고, 어느 누구의 존엄과 권리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도시에서 역사에서 배제되고 삭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권도시의 미래를 보다 완성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화운동 속에서 도시빈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4월혁명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하 금 철

해방 후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 4월혁명은 오랫동안 '학생혁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빈민이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당시 사망자 또는 부상자 중 다수가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이었고, 성인 중에서도 무직자 또는 하층노동자였다는 사실로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수치로 드러나는 도시빈민의 참여 수준이 당시 시위의 목표와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 4월혁명의 역사적 기억에서도 도시빈민의 존재는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혁명 당시에는 시위를 과격한 양상으로 몰고 갔던 '난동', '파괴', '방화'의 주체로, 이듬해 5.16쿠데타 발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은 해소되지 않은 불만을 대책 없이 표출하여 온 나라를 '데모공화국'으로 만드는 '질서파괴자' 정도로 인식될 뿐이었다. 4월혁명의 성취는 오직 이들과 대비되는 학생들의 질서의식과 숭고한 희생으로 이뤄낸 것으로 여겨졌다.

4월혁명에서의 이러한 경계설정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사전에 규정짓는 강력한 규범으로 작동했으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후적 해석에서도 반복 재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빈민의 저항은 하나의 운동사적 흐름으로 파악되지 못했고, 에릭 홉스봄의 말처럼 '전(前)정치적'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도시빈민의 저항을 '전(前)정치적'인 것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저항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 '전정치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확정짓는 적극적인 담론화 과정이었다. 1984년에 『1960년대』라는 책을 통해 4월혁명에서 도시빈민의 주도성을 처음으로 인식했던 김성환은 도시빈민이 시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유를 "생존 그 자체의 극한적 상황과 존재의 부동성 및 아노미 상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이었던 신상초는 4월혁명 직후 《사상계》에 발표한 글에서 4월혁명의 의의가 "무위도식의 폐풍이 가셔지고 근로의 의욕이 앙양하게 되었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발화자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두 발언은 서로 겹쳐 읽을 필요가 있다. 즉, 혁명의 시작은 (도시빈민의) 무질서에서 비롯되었지만 혁명의 성과는 그러한 무질서를 근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도시빈민의 시위를 '무질서'와 '범죄화'의 양상으로 읽어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정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최초로 출현했던 계기로서 4월혁명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월혁명 및 5-60년대 문헌에 대한 면밀한 재독해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4월혁명은 낡은 지배체제와 억압의 '전복'이기보다는 바람직한 질서와 규율의 '회복'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4월혁명을 이처럼 반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이라 불렸던 것들이 어떤 주체의 목소리를 정치 영역 바깥으로 배제하고 낡은 질서를 재생산하는데 무감각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월여성과 인권도시 광주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
정 현 애

광주광역시는 2007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조례를 제정, 2010년 7월 '인권사무소'를 설치하였고, 2011년에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인권 도시의 확산에 역할을 하였다. 2012년에는 '인권지수 및 인권형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출범시켰다. 2013년에는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여 '광주인권도시 원칙(Gwangju Gui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2020년은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리는 해로 '배제되고 삭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하나로 오월여성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권도시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참여한 주체들에 대한 활동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오월여성에 대한 기억의 문제는 인권도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오월여성은 5·18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참여자였다. 인권은 자신의 삶 주체임과 동시에 자기 삶의 터전인 공동체의 주최로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시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을 주체로 상정할 때 특정한 정체성으로 '오월여성'을 비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좁은 의미로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여성만을 지칭할 수도 있고, 1980년 당시 10일간의 투쟁을 의미하는 오월항쟁에 참여한 여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 5·18의 기억투쟁인 오월운동에 참여한 여성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대를 넘어 5·18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을 말 할 수도 있다.

이 시간에는 시기적으로 1980년 5월 당시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과 오월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자 석방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오월여성 활동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동안의 노력도 알아보고자 한다.

주체로 참여했던 오월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은 5·18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일에 대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역사의 주체'로서 소외되는 고통도 있다. 전자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일이라면 후자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일이다.

인권도시는 모든 시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사회이다. 오월여성의 활동과 고통, 희생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의 문제는 5·18정신이 사회구성원의 실제 생활에서 구현되는가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노력한 오월여성의 활동을 기억하는 일은 다른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주체로서 활동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온전한 역사적 주체로서 설 때 민주사회는 더욱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UNESCO-APCAD) 워크숍>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은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 시·군 의회, 시의원 등이 모여 우선순위와 공약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 역할을 한다. 2006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포용적 도시사회를 위한 도시지역회의'에서 창립된 이 회의는 지역 전체의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공평한 사회를 촉진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PCAD는 포용 및 지속 가능 도시 국제연합(ICCAR)의 지부로서 활동하며, 글로벌 ICCAR 운영위원회에서 아태지역을 대표한다.
글로벌 ICCAR의 10대 실천계획 내용을 반영하며 APCAD의 10대 실천계획은 APCAD의 첫 10년(2006~2016년) 을 이끌었다.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특히 11번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에 대한 글로벌 약속을 인식하여 2016년에 ADCAD의 10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어 10개 지점 행동 계획의 지속적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해비타트 III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APCAD 우선순위 논문과 뉴 어반 어젠다에 대한 글로벌 공약에 반영되었다. 2018년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ICCAR은 낭시 선언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포함한 새로운 우선순위를 채택했다.
연합의 재출범은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진행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0회째를 맞이하여 인권의 역사를 성찰하여 인권도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가 어떻게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사례를 공유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향후 10년 안에 APCAD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2006년 APCAD 10대 실천계획에 따라, UN SDGs, Habitat III Global Priorities 및 낭시 선언, 2020년~2030년 APCAD의 우선순위는 새로운 10대 행동 계획에 의해 정의된다.

2020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워크숍은 신규 APCAD 회원도시 유치, 2020~2021년 APCAD 실천계획 우선순위 파악, APCAD 의장도시로서의 광주를 홍보, 웹사이트 및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한 APCAD 운영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1>

인권 도시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emt)과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 :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서 인권 도시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도시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 INFID와 Komnas HAM은 인도네시아의 각지에서 인권 보호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도록 100여 개가 넘는 도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50개 이상의 도시가 인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 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 도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4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성 및 일관성 2) 지방 정부 관료 및 공공 단체(지역사회 지원 요원)의 인권 문제 대응 능력 3) 시민들의 정치적인 지지 4) 부패
우리의 안목을 넓혀서, 인권 도시의 범위를 인도네시아 이외의 여타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유엔 체제의 내부와 외부에서 인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할 시점이다. 또한, 지금은 인권 도시의 개념과 구현이 대세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 이외에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이행 공약 확보를 위한 다자간 실행 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공통 전략 및 단계별 실행 과정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국가인권위원장
아흐마드 타우판 다마닉

인권의 증진은 언제나 인권운동의 핵심이다. 지난 10년 중 후반에 등장한 경향 중 한 가지는 지방정부가 관할 내 인권을 증진, 보호, 이행하기 위해 취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진전은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역할 결의안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 결의안 및 다른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국가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무를 증진, 보호,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반면 지방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념은 인권도시 프레임워크(Human Rights Cities Framework)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이다. 세계 지방정부의 장이 이 프레임워크를 수용, 증진, 이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도시의 시장 및 리젠트(regent :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도네시아 50개 이상의 시장 및 리젠트들이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를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금 10년 중 가장 힘든 해가 되고 있다. 이 팬데믹은 모든 분야의 인권 이행, 특히 건강 부문 이행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영향은 새롭게 생겨나는 상황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요인에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과 정책 실현이 지방정부 수준을 비롯한 인권 원칙을 따르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함에 따라,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는 지역 수준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다루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인권도시 프레임워크는 이 상황을 살펴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한 인도네시아의 시장 및 리젠트들, 또한 기초 지자체장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데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다른 도시 및 리젠트에 영감을 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투 시장
데완티 룸포코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자르마신(Banjarmasin), 포용의 도시

반자르마신 법무과장
룩만 파들룬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셀라탄) 주정부 법의 개념에서는, 주정부는 모든 인간과 개인들의 인권을 인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법과 인권 앞에서 평등하다는 점에서 그 뜻을 함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반자르마신 시정부는 '인권도시'의 개념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주류화, 전파, 사회화에 대한 초기 노력이 교육활동, 젠더 기반 예산, 젠더 주류화 지방조례,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어린이 가치(child-worthy) 도시 조례, 빈민 법적지원구역 조례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반자르마신 시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으로 '인권 중점 도시(city of concern human rights'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반자르마신 도시 포용 전략

적절한 정부의 힘(영향력) 배분을 위해 반자르마신 시 정부는 지역 의회(DRPD)와 함께 의회법제이사회 Bapemperda Tahun을 통해 포용 도시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다음 사항에 힘쓰고 있다.

- 통합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정보 제공
- 장애인을 위한 용인 가능한 계획 및 예산시스템
- 기본적 고충처리 시스템 양식 개발
- 장애인 대상 시설 및 인프라 제공
- 범분야 협력 및 중재를 위한 화합 양식 개발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 2>

인권도시 그리고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2016년에 인도네시아의 4개 도시에서 실시된 INFID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서 관용/불관용의 성향을 강화하는 여러 계층 요소들을 찾아내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i) 중립적이면서 확고한 태도 유지 (ii) 포괄적인 법의 보호 (iii) 조기 경보 시스템 유지 및 운영 (iv) 적극적인 중재 및 조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상위 계층에 속하는 요소는 종교, 정치 및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관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폭력적 극단주의로부터 각각의 활동 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한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PVE, Preventing Violent-Extremism)에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 정부가 폭력적 극단주의를 인권 도시 구현 및 운영의 주요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적 극단주의도 역동적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UN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언급했듯이, 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 모여 인권 도시의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내재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도전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며 미래를 위한 혁신과 기회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세마랑 시장
헨드라르 프리하디

세마랑시는 종교적 다양성이 있는 도시로, 이러한 다양성과 함께 폭력적인 극단주의로 매우 위험하다. 이 도시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처는 사회 분열을 피하기위한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는 Pancasila(판차실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도네시아 국가를 분열시키며, 단결과 성실성을 약화시키려는 숨겨진 의제를 가진 급진주의 운동의 존재이다.

함께하기 운동("Moving Together")은 지역 개발 참여를 위해 기자, 정부, 기업 및 주민들이 협력하도록 세마랑 시장의 주도로 시작한 운동이다. 종교적 평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공공 서비스, 공공 시설 및 경제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현하며 세마랑시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CN 동남아시아 컨설턴트
데위리니 앙그라에니

인권이란 전지구적인 약속으로, 국가정부에서 이끌고 국제적인 토론을 통해 지지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은 지방정부가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왔다.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에서 정치인까지, 그리고 기업에서 시민사회까지 모두가 모든 시민들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체가 이러한 곳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듯이, 이들은 이러한 이상이 공격을 받을 때도 연대하고 함께 해야 한다.
정치적이며 복잡한 추진력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는 정부 각 층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악명 높고 어려운 과제를 가져다 준다. 가장 간단한 것을 말해보자면, 극단주의는 우리의 집단적 인권에 완전한 위협을 보인다. J.M.berger 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회 정체성 이론은 '극단주의는 집단의 성공이나 생존이 외부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동의 필요성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믿음을 뜻한다'고 제안한다. 런던의 전략담론연구소(ISD : the Institute for Strategic Dialogue)는 더 나아가 극단주의를 '집단 내 집단에 의한 외부 집단의 비인간화를 정의한 전체주의 신념' 이라고 정의했다(in-group the dehumanization of an out-group by an in-group).1)
폭력부터 제압(정복)에 이르기까지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술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노력에 더 깊은 난제를 더하고 있다. 우리가 극단주의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이해를 인권 파괴에 재조명한다면,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노력들이 다르게 보일까? 우리의 접근 방법이 위협에 '대응'하는 것보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인가?
제마 이슬라미야(Jemma Islamiyah),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비밀 시설(cell)을 구축한 가운데,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과 같은 단체들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적절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불안감을 목격하고 있는데, 세계 163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법인 세계평화지수(GPI : Global Peace Index)의 '부정적 평화(negative peace)' 지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2)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적 수준에서 인권과 반 극단주의 방법의 중첩되는 부분을 알아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기존의 반 극단주의 노력이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는지, ii) 강도시 네트워크(Strong Cities Network)가 추진하는 지역적 과업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도시 주도의 우수사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책과 프로그램은 너무 자주 별도 영역으로 보이지만, 이 둘을 가지고 시너지를 가장 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권고사항이 결론으로 제시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라티가 시의 개발 접근법 인권 기반 COVID-19 대응

살라티가 시장
율리얀토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의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권리자인 시민과 시민의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국가 간의 책임성과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 부여가 핵심이므로 개발의 맥락에 있어 중요하다. "정부는 정부가 COVID-19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유행(Pandemic)은 많은 상황과 정책 방향에 변화를 주었다.

이 시대의 정부는 국민의 기본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유행 동안 시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에서부터 시민 기본 욕구의 충족, 현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였다. PDAM(Perusahaan Daerah Air Minum, 인도네시아지방수도공사) 수도 부양책, 지하수세, 화물 요금, 부동산세(PBB-P2: Tax on Land and Property of Rural and Urban Secor), 호텔세, 식당세 조정 등 다양한 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침시장 상인 868명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 주지사와 국내외 다양한 매체까지 여러 계층에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보건 분야는 시 정부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상류층 부터 하류층까지 보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벤치마크로, 대량으로 신속한 면봉 테스트 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준비, 장비, 개인 보호 장비 공급, 치료실 제공, 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건강한 대피소 공간의 제공 등을 뜻한다. 국민의 권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지역사회의 개인 보호 수단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씻기, 비누, 안면 보호구를 제공하여 시에서의 COVID-19감염 사슬 끊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 정부는 항상 밀접 접촉 사례, 의심 사례 및 확인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려 노력하였으며, 유효하고 투명한 데이터 공개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규모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정부가 측정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표적화하고 유익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규정 면에서 시 정부는 시에서 COVID-19질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건강절차 도입 및 실행에 대해 시규 17/2020을 비준하였다. 새로운 적응 기간 동안 보조·의무 및 금지 사항들은 전체 지역사회에서 실행 및 준수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언제 COVID-19이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OVID-19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및 안보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에 확산되었다. 이는 인권 기반 접근 방식으로 COVID-19에 대응하고 새로운 정상 시대에 강인한 도시를 보장하기 위해 시 정부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해야 할 임무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한국에서도 드디어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18년 만에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한국사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18세의 유권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대표해줄 국회의원을 직접 뽑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에 사회도 정치권도, 그리고 교육계도 매우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사실 청소년은 늘 사회변화의 복판에 서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역사적 사건마다 빠짐없이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역사의 주체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미성숙'이라는 굴레를 씌워 정치라는 공식적인 경로에서는 청소년을 배제해왔다. 그 족쇄를 풀 단초가 '18세 선거권'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 정치참여와 관련해 아직 한국사회는 남은 과제가 많다. 공동체 내에서 청소년 시민은 어떤 존재인지, 청소년 정치참여가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 등 교육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면된 역사의 주체에서, 이제는 정치참여라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인정된 역사의 주체로서 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정치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의 사례들을 들여다보고, 한국사회의 현재와 과제들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시민이자 역사의 당당한 주체인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인 사회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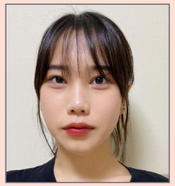
핀란드 민주주의와 청소년 정치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조교수
서현수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세 선거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2020년 4월 총선이 코로나19 대유행 및 학교 폐쇄 조치 속에서 치러지면서 18세 선거권 제도와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해 함께 숙의할 사회적 기회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나아가, 피선거권 조항의 변경 없이 취해진 18세 선거권 도입 조치는 미완의 개혁으로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 개혁이 요청된다. 이 글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청(소)년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핀란드 사례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한다. 최근 34세 여성 총리를 선출한 핀란드는 어린이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선거, 주민발의제, 정당 청년 조직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비공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교과과정 또한 통합적, 실용적, 가치기반 접근에 기초해 민주주의와 시민(정치)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통해 21세기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혁신 방향을 가리킨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18세 선거권의 의미와 남은 과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이 은 선

이 글은 만 18세 선거권의 의미와 18세 선거권 논의의 한계에 대해 다루며 청소년 참정권의 남은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권 연령이 낮추어지기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하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는 것과 18세로 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바로 18세부터는 일부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은 정치를 해선 안 된다'라는 오래된 장벽에 균열 내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18세 선거권이 이루어졌음에도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의 본 취지와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18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넘어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18세 선거권 논의의 한계를 비롯해 청소년 참정권의 남은 과제를 확인하려 한다. 청소년 참정권의 남은 과제를 정당법과 선거법, 학교 내 정치적 권리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시하려 한다. 앞선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 참정권이 더 확대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로부터의 교훈과 현재로부터의 교훈
독일의 청년정치교육현황

함부르크 주정치교육원 부대표
옌스 휘트만

본 발제는 역사적 측면에서 독일 정치교육의 개념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나치 통치시기, 1945년 종전 후 동서독 분단시기(민주주의 對 독재주의) 그리고 1990년 독일통일 이후의 시기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유럽 나아가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험 그리고 정치교육이 갖는 본질적 난관도 살펴볼 것이다.

첫째, 독일 정치교육분야의 전반적인 체계를 소개한다. 독일에는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및 각 연방주에 소재한 16개 주립정치교육원 외에도 주정부나 민간이 후원하는 다수의 정치교육기관이 존재한다. 본 발제는 독일의 정치교육이 정규교육과정 및 국가기본원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본 발제는 정치교육 관계자들의 다중적 관점(multi-perspectivity), 논란 및 관심에 초점을 두고,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기반하여 수립된 독일의 정치교육 전반의 개념적 토대를 논할 것이다. 셋째, 본 발제는 독일 청년정치교육의 주제와 도구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예컨대, 주제에는 민주주의 참여, 선거 및 투표연령, 극단주의 예방과 시민의 용기 등이 있다. 도구의 사례로서 민주적 참여와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각종 워크숍 및 2019년 함부르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행사인 "민주주의 축제(Fair of Democracy)") 및 선거(투표연령에 관한 논의 및 정치공약비교프로그램 "발-오-마트(Wahl-O-Mat)")를 소개할 것이다.

필자는 인권과 민주적 참여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오늘날 추진되는 청년정치교육의 개념과 각종 프로젝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와 현재에 관한 지식의 전달 외에도, 청년들은 오늘날의 정치현안과 민주주의 내에서 참여의 효과성을 체험할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본 발제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 특히 민주주의를 위하여 오랫동안 투쟁해 온 광주와 통일된 독일의 정치교육 현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할 것이다. 한국(광주)과 독일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시민의 용기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국가권력에 항거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실천(그리고 정치교육의 도움)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교육센터 워크숍>

전 세계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인권을 기반으로 도시를 운영하는 '인권도시' 개념을 만들고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UN 인권이사회는 2013년부터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인권도시 운동을 적극 독려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해 인권도시는 물론 UN OHCHR, UNESCO, UCLG, RWI 등 다양한 인권 기구·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도시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시아지역 인권도시 연대 강화를 위해 각 국의 지방정부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인권교육을 시작했고, 올해 5월에는 '국제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단체, 연구소 등 많은 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많은 국제인권교육 시행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인권교육센터'의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인권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UN OHCHR, UNESCO,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의 지역별·대상별 인권교육 전략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방정부 간 인권 네트워크 확산과 인권 기반 도시발전에 중점을 두는 만큼 국제인권교육이 구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 실천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은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 이 워크숍은 광주국제교류센터와 UN OHCHR, UNESCO가 공동주관한다.

국제인권교육센터
종합 계획

국제인권교육센터 공동센터장
신 경 구

광주시는 유엔인권대표최고사무소(OHCHR),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및 RWI(라울 발렌버그 인권 및 인도주의법 협회)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인권도시로서의 경험과 자원을 전세계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배경

광주시는 불의와 억압에 대한 저항의 역사 덕분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한국에서 있었던 8번의 주요 민중 항쟁 가운데 2번의 항쟁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1929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이며, 또 한 번은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후자는 1980년대의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초석으로서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공유될 자원

광주시의 역사적 유산과 정의로운 운동 덕분에 광주에는 지금까지도 인권교육을 위한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과 조례
- 인권 부서와 같은 인권보호 시스템
- 5.18 재단과 같은 민주주의 운동 관련 기구
- 5.18 국립묘지와 같은 추모의 장소
- 인권 지표와 같은 인권보호 장치

무엇보다도 광주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 명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권보호시스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지난 10년에 걸쳐 전세계의 가장 중요한 인권 관련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광주는 다양한 세계 포럼 세션을 운영하면서 전세계의 시 정부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각 지역의 인권도시와 인권기구들로 구성된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의 운영에도 인권 개념이 스며드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독재시절과는 다르게, 인권의 개념이 더 이상 과격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종합 계획과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발표될 것입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경제사회문제분과 팀장
폴리나 탄디오노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부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CCAR) 사무국장
안나 마리아 마즐로프

유네스코가 2019년 11월에 세계 "교육자 연수" 계획으로 시작한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Master Class Ser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s)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젊은이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인종주의와 차별을 조장하는 메커니즘을 없애는 방법을 이해하고 널리 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악이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 젊은이들에게 인종주의와 차별의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과 인종차별적 태도와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 젊은이들이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항하면서 스스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행 방식을 제시합니다.
-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투쟁에서 각 지역 및 국가와 전세계의 정책입안자들이 각각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젊은 참가자들, 전문가들, 인종주의 및 차별 피해자들(resource persons), 초청 인사들 간에 사회 내부에서부터 사회적, 도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금기들에 관해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동료 학습 포럼(peer learning forum)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인권에 근거한 접근법을 활용하는 본 과정에서는 주로 인종 차별, 성 차별, 원주민의 권리, 장애인 차별과 같은 포용 및 비차별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각각의 마스터 클래스의 프로그램 내용과 교과과정은 각 지역과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네스코에 의해 각 지역의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구상되고 설계됩니다.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는 실제 행사에서 젊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추구하는 활동을 실행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어 갑니다. 각 지역의 마스터 클래스 행사는 포용 및 지속가능 도시 국제연합(ICCAR)에 가입한 도시들과 협력하여 2020-2021년에 걸쳐 모든 지역에서 계획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역사적인 근원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에 근거한 3가지 주요 메커니즘(범주화, 계층화 및 본질화)에 집중합니다. 또한,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인종주의의 근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고, 성 차별과 같이 전분야에 적용되는 관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국립자연사박물관(프랑스 인류박물관)과 협력하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우리와 그들: 편견부터 인종주의까지"의 전시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본 시리즈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적 공간의 축소시대에 인권교육 및 인권연구에 대한 지원
딜레마, 기회 그리고 대학의 역할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스톡홀름지부 소장
마린 우드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공간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시민사회, 학문의 자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언론의 자유 등 세계 자유도('global freedom, 역주 : Freedom House에서 조사 및 발표')는 14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다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함에 따라 민주적 공간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도시가 봉쇄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까닭에 시민사회의 운영능력도 쇠퇴하였다. 시민사회조직은 시민의 공간과 정치적 공간을 보호하고 인권과 자유를 수호함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대학은 국제인권증진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의 민주화 운동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교육(미래세대의 의사결정자 양성), 연구(유의미한 법률과 정책개발); 및 활동지원(소통플랫폼 제공). 시민과 민주주의 공간이 매우 제한된 국가에서 강의실은 여전히 개인적 의견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며 대학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합법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언론노출이 거의 없는 조용한 인권활동방식"을 취한다.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여전히 낮은 강도의 인권교육이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고는 민주적 공간이 쇠퇴하는 시기에 인권교육과 인권연구의 중요성을 논하고 인권교육과 관련된 딜레마, 도전 그리고 기회 그리고 벨라루스, 캄보디아, 중국 및 터키 소재의 대학에 대한 지원사례를 고찰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인권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헬가 리들

독일 뉘른베르크의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in Nuremberg, Germany)
뉘른베르크의 인권교육은 "인권의 길(Way of Human Rights)"이 만들어진 지난 1993년에 시작되었다. 평화와 인권의 도시가 되겠다는 뉘른베르크의 약속은 나치의 전당대회 장소였던 이 도시의 어두운 과거와 대비된다. 본 워크숍에서는 뉘린베르크 인권교육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소개될 것이다.

역사적 장소에서의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in historical locations)
뉘른베르크는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장소를 갖고 있다. 예컨대, 나치전당대회 역사기록관(Documentation Centre Nazi Party Rally Grounds)과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기념관(Memorium Nuremberg Trials)은 역사적-정치적 기억과 학습을 위한 장소로서 조성되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세미나는 우선 그러한 장소,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날의 현실과 맞닿는 접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찰관의 훈련과 추가교육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나치정권 하에서 경찰이 수행했던 역할을 다룬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거사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치안수칙으로 초점을 옮겨간다. 또한, 경찰의 현행 조직구조, "자유"와 "안전"사이의 대립과 같은 현행 경찰업무의 인권이슈 그리고 그 밖의 현안이 논의된다.
독일연방군(Bundeswehr)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프로그램은 나치 시기 독일국방군(Wehrmacht)의 역할 그리고 독일국방군에 의하여 자행된 범죄행위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단죄되었던 방식을 다룬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 "개인의 책임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독일국방군의 과거는 오늘날 독일군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오늘날 군인의 역할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

목표집단별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for specific target groups)
뉘른베르크시는 최우선 과제로서 "적극적인 인권 구현"을 시정방침에 명시하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의 모든 공무원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에 있어서 인권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신임 공무원은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1일 인권세미나에 참여한다. 세미나의 내용은 시 행정활동의 지침이 되는 인권원칙,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수호하는 국가의 3대 의무로 구성된다. 일상적인 업무관행에서 마주하는 전형적인 사례 그리고 시정방침 추진을 위하여 개발된 공무수행 방안이 소집단 단위에서 논의된다. 신임 공무원을 위한 또 다른 1일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차별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본 세미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의 징후와 메커니즘에 대한 참가자의 감수성 배양을 목표로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in geriatric care)
뉘른베르크시는 시립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도 "요양시설의 인권"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일 인권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 기본과정 외에도 세미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상황에서의 인권실현 방안에 중점을 둔다 – 요양시설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 참여 및 포용과 같은 인권원칙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청년세대의 기억방법 (Putting remembrance in young hands)
몇 해 전부터 인권사무소는 "청년세대의 기억방법"이란 제호에 따라 국민애도일(Volkstrauertag) 또는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Holocaust Memorial Day)과 같은 공식추도행사의 기획과정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왔다. 이러한 조치는 그곳에서 고통을 겪었던 생존자의 실제 기억과 전쟁, 폭력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 평화롭고 차별 없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청년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교육

부에노스아이레스 기억과인권박물관장
알레한드라 나프탈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알레한드라 나프탈 (Alejandra Naftal)이고 남아메리카의 남부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우선 제10차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최자 분들, 특히 아만다 플레티 마르티네스 (Amanda Flety Mart nez) UCLG 사회적포용 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UCLG CISDPH,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코디네이터에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해 성찰하고 인권 침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 예방하고 경계하며 토론하고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우리를 방문했고 2019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대표 김선정씨와 그의 팀 동료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자들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구 ESMA(Museo Sitio de Memoria ESMA, 구 시립기념박물관*)에서 비엔날레를 조직하기 위해 일주일 넘게 함께 일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 역주 : 원래 각종 고문이 행해지던 곳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지구촌을 덮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아르헨티나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1976년에서 1983년 사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극단적 시민군사독재 시절 우리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비밀 구금과 고문, 말살의 중심 장소 중 하나였던 해군의 교육장이었던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테러로 인해 약 3만명의 구금된 실종자, 수천 명의 정치범과 추방된 사람들, 그리고 수감된 어머니에게서 탈취하여 거짓 신분으로 양육된 5백명 이상의 아기 등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우리가 인권단체 'the Grandmothers of Plaza de Mayo' 와 함께 아직도 찾고 있는 살아있는 실종자들입니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 회의>

「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UNESCO-ICCAR) 글로벌 운영위원회 회의 」

추진배경

2019년 10월 30일 파리 UNESCO에서 열린 포용적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의 글로벌운영위원회(GSC)회의에 이어 7개 지역 및 국가연합의 대표자들은 교육, 주거, 고용 및 문화활동 등 주요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는 도시간 10가지 약속, 10대 행동계획(Ten-Point Plans of Action)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GSC는 ICCAR의 포용 및 차별금지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방정부 사회정책(social policy)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10대 행동계획의 개정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개정작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및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of Habitat III)와 보조를 맞추고 동시에 현대도시의 모습을 형성하는 사회적 변혁(social transformation)이 더 깊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한 2016년 볼로냐선언(Bologna Declaration)과 2018년 낸시선언(Nancy Declaration)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작업은 ICCAR 행동계획의 기둥인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청소년참여(youth participation)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 분야별 도시이해당사자간 협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동계획에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투영시킬 것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도시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기 GSC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도시에서의 포용과 차별금지에 관한 ICCAR의 활동을 홍보하고, 포럼에 참가하는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접촉면을 넓히고 도시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타의 도시행위자(urban actor)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여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보건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 누구도 소외되도록 방치하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또한 포용적 사회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는 ICCAR 회원도시의 약속에 따라, GSC회의는 보건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기반의 도시 이니셔티브를 널리 알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검토하며,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도시가 어떠한 개입(intervention)을 할 것인지 전망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목표

ICCAR의 지역 및 국가연합은 2020년 10월 개최예정인 GSC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기회를 갖는다.
10대 행동계획 개정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의 이행방식(modalities)에 관하여 논의한다;
도시의 인권제도강화를 위하여 도시행위자가 취한 구체적 행동을 여타참가자와 공유하고, 도시간 협력(city-to-city cooperation)을 강화하며, 여타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연합 광주광역시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향후 여타지역으로 확대적용 예정인 포용적 도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타운홀>

타운 홀 도시(Town Hall Cities) 학습

가장 중요한 정상급 회담인 2020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계기로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션은 아시아 지역 도시 인권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문제(전망 및 현실)에 관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당국들 간의 대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GPR2C, Global Platform for the Right to the City)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사회적포용 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 (CISDPH, 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는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 경제적 포용,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존중에 관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파트너쉽과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에 관해 함께 대화하며 협력을 지속해 왔다.

GPR2C와 CISDPH는 아시아 지역에서 정의롭고, 포용력을 갖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지역사회 및 주거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당국과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아시아 도시 인권으로서 도시권 의제에 적합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세션을 마련하였다.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 인권도시 확산 프로젝트 워크숍 」

지난 25년 동안 세계 도시들은 스스로를 인권도시라 부르며 시민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시민의 인권이 뚜렷하게 개선된 도시들은 세계적으로 100여 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그동안 인권도시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리고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세계인권도시포럼 국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전 세계에서 뚜렷하게 인권을 실천하는 도시들의 숫자를 10배로 늘리고자 한스 사커스는 가칭 '인권도시 10>100>1000'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권도시를 중심으로 인권 실현을 중점에 두는 도시들을 확대하고 '인권도시'라는 타이틀이 도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진정한 증표가 되고 인권 기반 지역개발에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지방 차원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국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한스 사커스가 자신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목표, 한계, 요구, 절차, 협력체계, 세부과제, 재원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이후 국제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도시 네트워크, 인권 관련 국제기구,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프로젝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회의 일정 <10/10>

09:00~12:00	**T7 안전도시**	144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국제안전도시와 평생학습의 역할	
주관	대한안전연합	
개회	좌장 **배영주** [한국] 조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제	**데일 한슨** [호주] 공인 국제 안전 커뮤니티 의장	온라인 중계
	조준필 [한국]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현민 [한국] 대한안전연합 대표	
토론	**이기언** [한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원	
	정재서 [한국]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과 교수	
	황윤석 [한국] 라이프가드코리아 본부장	

10:00~13:00	**T8 이주민**	148쪽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문자	
주제	5·18과 이주민, 인권도시 미래	
주관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사)이주가족복지회, 다누리콜 1577-1366 광주센터	
인사말	**이철우** [한국] 5·18 기념재단 이사장	
개회	좌장 **박흥순** [한국]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소장	
발제	**홍진아** [베트남]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온라인 중계
	메리암 다비나그라시아 마뉴엘 [필리핀]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파티키리 코랄라라게 나야나 [스리랑카]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	
	아브드코디로바 밉투나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대표	
토론	**나의갑** [한국]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김순이 [한국]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데이비드 티자드 [영국] 서울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11:00~12:00	**H2 '지방정부와 인권' 종합교육과정 프로그램**	153쪽
공식언어	영어	
내용	프로그램 평가 및 수료식	
주관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사회 **나츠무 라일라** [인도네시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관계자	
축사	**제이슨 스퀘어** [호주]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자카르타지부 소장	비공개
격려사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축사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위** [인도네시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	
소감발표	프로그램 참가자	
수료증 수여	**헬레나 올슨**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선임프로그램 담당관	

회의 일정 <10/10>

13:00~14:00	**O2 폐회식**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수어, 문자	
내용	회의결과 종합보고 및 선언문 채택	
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개회	사회 **신경구** [한국]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종합보고	전체회의	온라인 중계
	주제/기타회의	
선언문 낭독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영상 상영	10주년 기념 소감 영상	
폐회사	**김종효** [한국]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와 평생학습의 역할과 과제

안전도시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가정, 학교, 산업체 등 전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안전의식과 안전실천행동이 습관화되고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인가?' 에 대한 성찰 및 그에 따른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재음미 해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도시를 평생학습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안전은 생애 발달 단계별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모든 안전교육은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공간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안전도시, 안전문화운동이 정부 및 산업체, 학교 안에서 주도라는 하나의 틀에 갇혀서는 완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학교, 가정, 사회 일상의 여러 공간들이, 그리고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안전도시 안전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이 완성될 수 있으며 제도적, 사회적 다양한 지원과 운동이 필요하다(정현민, 2019).

이상의 것을 종합해보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전 공간, 전 생애에 걸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운동이 공유되고 재가공 되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작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국내외 우수프로그램들과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안전도시 역할과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안전도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안전은 인권이다

공인 국제 안전 커뮤니티 의장
데일 한슨

매 6초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상해(injury)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580만명에 달한다.

상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하는 동안, 상해로 인하여 수십 명이 입원하고 수백 명이 응급실을 찾으며 수천 명이 외래진료를 받을 것이다. 상해로 인해 만성적 혹은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안타까운 수치도 외상과 폭력으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상해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 3명중 1명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여아 4명 중 1명 그리고 남아 10명 중 1명은 유년기에 성적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은 평생 가는 상처를 남기며, 우울증, 자살, 학업포기, 실직, 수감, 원하지 않는 임신, 성병, 흡연, 마약중독 그리고 다른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공동체가 이처럼 불필요한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상해는 예측가능(predictable)하기 때문에 예방가능(preventable)하다. 공동체는 그들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통제함으로써 미래의 모습을 다시 그릴 수는 있다. 관련연구에 따르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는 상해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24일 광주광역시를 361번째 회원으로 지정한 국제안전도시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ies Network)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All human beings have an equal right to health and safety)"는 비전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비단 상해가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상해가 회피 가능한 비용인 반면, 안전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투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위한 과업이 결코 쉽지 않다. 효과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네트워크에 헌신할 수 있는 개입(intervention)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공동체의 자원을 파악하고 동원하며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정통한) 연구자, (구체적 해결방법에 대하여 정통한) 실무자와 관리자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정통한) 공동체의 지식과 전문성을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re)는 동료심사 (peer review)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공동체가 장기적 차원에서 상해를 대폭 경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체의 안전수준은 지역사회 기반의 상해예방 및 안전증진 7대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받는다:

1.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 및 공동체 참여(Effective governance, collaboration & community engagement)
2.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는 종합프로그램(Comprehensive programs covering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 이하 중략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증진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조 준 필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에서 채택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All human beings have equal rights to health and safety.)"는 안전도시 헌장(Manifesto for Safe Communities)을 기초로, 안전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의 각 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로 모든 손상 분야 및 모든 인구집단, 모든 환경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주도의 안전증진사업을 이르는 말이며,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안전증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손상의 문제를 공중보건학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All」" 전략과 세계보건기구 사고예방 및 손상관리 프로그램(WHO Global Program on Accident Prevention and Injury Control)에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역량을 계속해서 발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1. 지역사회 내의 손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
2. 손상예방/안전증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3. 모든 인구집단, 모든 환경, 모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 기반 강화,
4. 근거 중심의 안전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5. 안전증진 사업의 수행 과정 및 성과 평가,
6. 국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에 책임 있는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사고/손상에 대한 근거중심의 사업 추진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상예방 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손상예방 사업의 목표 지표 및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이 해당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 구현

대한안전연합 대표
정 현 민

안전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급속한 산업 발달과 문명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간의 삶의 질과 편리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안전사고와 질병들이 개인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안전도시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가정, 학교, 산업체 등 전 공간(Life wide)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Life long)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안전의식과 안전실천행동이 습관화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형성시켜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 인가?' 에 대한 성찰 및 그에 따른 역할과 과제에 대해 재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학습적 패러다임에서 볼 때, 안전에 대한 학습은 생애 발달 단계별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모든 안전교육은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공간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교육 방향과 체제가 '안전평생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접근을 통한 안전문화교육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삶 속에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적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문화 인프라를 발굴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가칭)안전문화교육진흥원' 이 필요하다.

안전도시다운 안전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와 안전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작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들이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도출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조력했을 때, 진정한 주민주도의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한 도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안전도시가 보다 활성화 되어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민>

5·18과 이주민, 인권도시 미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광주정신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주제회의를 진행합니다. 이주민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토론한 내용을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중에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광주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학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제회의 형식을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주민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 공동체(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스리랑카 등)가 5·18기념재단과 연계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후에 이주민 공동체별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주제회의 발표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주민과 인권" 주제회의는 이주민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주민 발표자 5명이 발표한 후 해외 토론자와 국내 토론자가 토론하는 참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와 토론 후에 광주에 살고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5·18광주정신에 비추어 살아갈 지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광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이 이주민 모국 민주화운동을 회상하고 나누는 시간과 공간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주민이 이해하고 성찰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깨달음과 지혜를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와 해외에 온 토론자와 나눔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베트남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홍 진 아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이 되었다. 매년 5월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주는 5·18민주화운동은 아프고 슬픈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광주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지만 5월이 되면 마음에 비가 내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이 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얼마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어서 역사를 알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들으며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일반 시민들을 무조건 죽이기도 했던 과거를 기억한다. 베트남 시민들 가운데 아직도 억울함과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베트남 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베트남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해 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을 맞고 몸도 마음이 다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0년 5월 당시 내가 광주에 있다면 나도 광주 시민으로서 데모하고 '독재주의 물러서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쳤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싸우며 광주를 지키기 위한 시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민공동체는 광주 시민들 스스로 만들었다. 여성들과 시민들이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광주지역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 수많은 용감한 희생자와 피를 흘린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살게 된지 14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광주 땅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나는 광주 시민이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민주화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와 광주 시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려주려면 5·18민주화운동 이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워서 같은 고향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영상이나 영화를 같이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베트남 이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나눈 후 5·18묘지를 방문할 것이다. 광주 역사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고, 후손들이 알게 되면 큰 힘으로 광주, 즉 빛고을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필리핀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광주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메리암 다비나그라시아 마뉴엘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 사람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발제하게 되었다. 필리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발제를 맡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0일 동안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다. 22년 전에 광주에 왔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에 한국은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세상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군사독재정권과 쿠데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이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잘 자란 것일까?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사회적 숙제는 여전히 많다. 정치도 좋아져야 하고, 경제도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쏙 빠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과 함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잘 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나?"
"나는 좋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구성원인가?"

광주에서 그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여 얻게 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얻게 된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녀들이 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변화는 언제나 남이 아닌 '나'로부터 일어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공부하고, 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했다.

첫째,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하면 당하게 된다.
둘째, 방치된 걸 도려내려면 희생이 크다. 썩기 전에 살펴보자.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넷째, 나부터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스리랑카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스리랑카 공동체 대표
파티키리 코랄라라게 나야나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다.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시민과 학생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 조국 스리랑카에도 비슷한 과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총칼로 군화발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배웠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지켰고, 스스로 시민공동체를 만들었고, 당시에 단 한 건 범죄도 없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동이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너무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광주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준 소중한 가치를 주변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나라 스리랑카는 아직 5·18민주화운동 때처럼 성숙한 시민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살면서 배우고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통해서 민주화와 시민의식을 우리나라 스리랑카에 알리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우즈벡 이주민 시각으로 바라보기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대표
아브드코디로바 밉투나혼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이주민)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우즈벡 이주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 세계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고민을 하며 전적으로 제 개인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평화롭고 평등한 미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며 목숨을 바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10일간 광주 시민들이 길에 나와 시위를 하고 독재자가 명령한 군인들에 대응하는 동안 광주에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 광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한 끼라도 챙겨먹을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었으며 가두방송을 하여 이 사건을 널리 알렸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주 공동체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 목숨보다 민주화를 외친 분들이 역사에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민주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즈벡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1983년 민주화를 외치다, 젊은 나이 44살에 사형을 당한 압둘라 커디리의 이야기이다. 압둘라 커디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이루고 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뇌 없는 인간'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닮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운 후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고문을 당했는데 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사법당국에 의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을까? 다음은 사람이 총에 맞아 다치고 생명을 잃었는데 시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할까? 군인이 총을 쏠 때 지휘관 명령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즈벡 사람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끝으로 5·18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 회복해 나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알려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 우즈벡 공동체 멤버들은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겠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겠다.
우리는 바른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전달되도록 연대하겠다.

※ 발표원문은 공식홈페이지 (www.whrc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인권' 종합교육과정 프로그램>

아태지역 지방정부를 위한 혼합학습 역량강화

광주광역시 및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아태 지부(ASPAC : Asia-Pacific)과의 협력으로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 The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는 아태지역 지방정부를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내 인권의 지역화를 주제로 종합교육과정(BLC : Blended Learning Course)을 운영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진행되는 과정은 온라인 모듈, 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웹세미나로 구성된다. 동 과정의 목적은 아태지역 지방정부 내 기획부서 관계자가 참여하여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첫 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지역 내 지속가능개발목표 절차에 있어 담당업무에 인권과 인권 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2020년 BLC 과정에는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아태지역 내 17명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온라인 과정은 효과적으로 구성된 18시간의 학습을 통해 참가자가 1) 인권 개론 2) 인권 기제 : 인권 모니터링과 이행, 3) 인권과 개발(SDG 포함)을 배우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의 SDG 이행 및 인권도시 개념에 대한 읽을 거리를 포함한다. 온라인 모듈을 이수한 참가자들은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일상 업무에 적용하게 된다.

온라인 모듈에 앞서 참가자들은 또한 인권, 지역개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웨비나에 참석하였으며, 이 웨비나는 올해 과정의 첫 단계이자 한국에 인권 도시 운동을 불붙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4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과정의 마지막 차례인 웨비나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 :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포럼 며칠전 참가자들은 개인프로젝트의 진척상황을 동료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후 포럼 세션에 참가하여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하는 동시에 다른 도시 및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갖게 될 것이다. 동 과정은 10월 10일 예정된 결론 및 평가세션을 거쳐 종료된다.

대한민국 민주장정 120년 전시회

일시: ~ 2020.11.08.(일)
관람: 김대중컨벤션센터 홈페이지
내용: 동학농민운동부터 촛불혁명까지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요사건 및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지닌 근현대사를 5.18 민주화운동의 관계를 상징적 건축물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함
주관: 김대중컨벤션센터

04. 안내

01. 코로나19 방역관리
02. 질의응답시스템
03. 안내데스크
04. 통역
05. 와이파이
06. 소셜미디어
07. 가이드북(행사용 어플)

01 코로나19 방역관리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1. 행사장 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2. 세계인권도시포럼 모바일입장권 스캔 또는 참석자 명단 확인 후 회의실에 입장 가능합니다.
3. 회의실 내 집합인원을 4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장등록은 불가합니다.
4.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사장과 회의실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며 방명록 정보를 4주간 보관합니다.
   (※이후 폐기)

02 질의응답시스템(Sli.do)

현장참가자와 온라인참가자간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청중질의응답시스템인 Sli-do(www.slido.com)을 이용합니다.

① www.slido.com 접속 또는 상단 QR코드 스캔
② 코드입력: #whrcf
③ 참석 회의 선택
④ 질문하기/추천하기/댓글달기

03 안내데스크

참가자의 행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데스크를 운영합니다.

① 일반 행사 정보 안내
② 정보 접근성을 돕는 애플의 '손쉬운 사용' 탑재 아이패드 대여
③ 가이드북(행사용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 안내

04 통역

1. 동시통역
   - 통역언어: 한국어, 영어 (일부 세션에서는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통역 제공)
   - 세션별 제공되는 통역언어는 일자별 프로그램 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문자통역
   온라인 생중계되는 세션은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주제회의 장애 세션은 현장에서도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3. 수어통역
   개회식 및 폐회식, 전체회의1, 전체회의3, 장애세션에서는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05 와이파이

1.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주변 Wi-Fi 신호를 검색
2. 'Public WiFi Free' SSID를 선택하고 웹브라우저 실행 (단말기의 기본브라우저 사용권장)
3. Public WiFi 접속화면 중앙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이용하기'의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무선네트워크 설정에서 'kdj2' 선택 후 비밀번호 'kdj12345' 입력

06 소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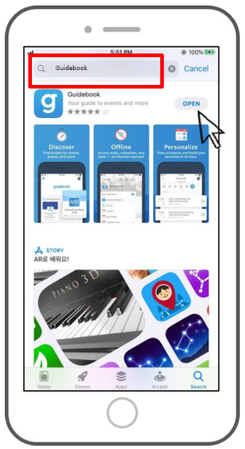
1. 아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 @whrcf
   트위터 : @GwangjuWHRCF
   인스타그램 : @whrcf
   유튜브 :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2. 해시태그를 이용하시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whrcf #whrcf2020 #cities4rights #Gwangju

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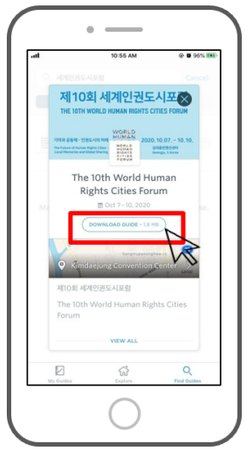
07 가이드북 (행사용 어플)

가이드북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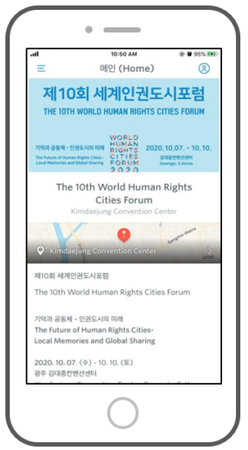


구글 앱스토어 및
애플스토어에서
가이드북 다운로드

가이드북 실행 후
“세계인권도시포럼”
검색



“세계인권도시포럼”
다운로드 버튼 클릭 및
접속



[나의 가이드북]에서
확인 가능

가이드북 활용방법

- 나만의 스케줄 관리
  : [프로그램 일정] 메뉴에서 참가를 원하는 회의 선택 및 [회의스케줄 관리] 확인
- 자료 다운로드
  : [연사&발표요약] 메뉴에서 발제자 선택 및 자료 다운로드
- 행사 공지 확인
  : [소통의 장] 메뉴에서 실시간 공지사항 확인
- 온라인회의 참가
  : [프로그램 일정] 메뉴에서 참가를 원하는 회의 온라인 접속
- 참가자 네트워킹 (※로그인 및 회원가입 필요)
  : [네트워킹] 메뉴에서 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전송

AMOREPACIFIC

Beauty Inside vol.3

아모레퍼시픽 유엔총회 주간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 Beauty Inside〉 3호 출간

Beauty Inside

2019 유엔총회 주간 이모저모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 1.5℃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 확산되길”

2019 유엔총회 주간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 3호가 출간되었다. 《뷰티 인사이드》 매거진은 2017년부터 시작 된 아모레퍼시픽의 CSR 프로젝트 일환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SDGs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 총회 주간 속 유엔(UN)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UNGA Week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는 매호 직접 유엔총회 주간에 참여해 그 속에서 얻은 정보와 인사이트를 아모레퍼시픽만의 시선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며, 뉴욕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 일상 속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현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14번 목표(Life Below Water)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WWF에 기부됩니다.

Beauty of 1.5℃

《뷰티 인사이드》 3호에서는 뉴욕의 UN 총회 주간의 여러 세션에 참여하며 발견한 전 세계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방법을 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욕의 청소년 기후 파업을 전개하는 ‘Zero Hour NYC’의 공동 수석 기획자 레이철 리, 혁신적인 패키지 프리 라이프를 열어가는 LOOP의 부대표 클레멘스 슈미드, 뉴욕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Brooklyn Greenway Initiative의 테리 카르타 등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지구를 지키는 노력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의 시작은,

“일상 속 아름다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봅니다.”

Sustainable Living_is Beautiful

아모레퍼시픽은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20만 명의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20 by 20’ 선언으로 UN의 EWEC(Every Woman Every Child) 글로벌 무브먼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 주간에 처음 참여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요 포털을 통해 ‘UN 총회 주간’을 검색해보아도 관련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의 모습만 보일 뿐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UN 총회 주간 속 유엔(UN)과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아모레퍼시픽의 시선으로 담아낸 UNGA Week 큐레이션 매거진,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UN총회 주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Global Goals를 향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여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유네스코(UNESCO)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광주국제교류센터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RWI)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
인권위원회(UCLG-CISDP)

해외협력
도시권 글로벌 플랫폼(GPR2C)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
(UNESCO-APCAD)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sia Democracy Network)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
(UNESCO-APCAD)
유네스코 포용 및 지속가능도시 국제연합
(UNESCO-ICCAR)
인도네시아 개발 국제 NGO 포럼(INFID)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인도네시아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주한 스웨덴 대사관
코타키타 재단(Kota Kita Foundation)
폴리스(POLIS)

국내협력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남구시니어클럽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연구원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누리콜 1577-1366 광주센터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대한안전연합, 인권운동더하기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 영어권 문화기억 큐레이터 양성 교육연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한국노인의전화광주지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후원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아모레퍼시픽
조선대학교병원